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인쇄/1999년 4월 19일

발행/1999년 4월 22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국제관계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9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69-9

5,000원

연구보고서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 현 경

민족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4자회담은 한·미 양국이 주도하고 북한이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북한의 요구에 한·미 양국이 대응하는 형태였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 체결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4자회담에 부정적 자세를 취해 왔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4자회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여 왔다. 한·미는 4자회담을 위한 공동설명회 및 3차례의 예비회담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식량지원 등의 수단을 통해 북한을 본회담에 참여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동안 4자회담 예비과정과 본회담을 통해 한국의 역할이 북한의 반대로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다.

4자회담 예비과정 및 본회담에서 미국의 역할은 주도적이었다. 미국은 식량지원 등 유인을 통해 북한을 4자회담에 참여시키고, 한국·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이 4자회담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미국은 미·북 대화채널과는 별도로 4자회담을 다자대화의 장으로 활용,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이 지역의 평화체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4자회담에서 미국의 실질적 역할을 감안할 때 4자회담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미국의 4자회담 전략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당면한 위기국면을 풀어나가려는 북한을 대상으로 구상·추진되는 것인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미국의 4자회담 전략

4자회담은 장기적 차원에서 미국의 중요한 정책목표인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당사자간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한국을 자극시키지 않으면서 북한과 별도로 쌍방간 걸려 있는 현안들을 협의하려는 의도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등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함께 달성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4자회담이 미·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 북한의 돌출행동을 억제할 수 있으며, 북한을 4자회담의 틀에 묶어 둠으로써 북한의 핵동결 유지 및 정전협정 파기 기도를 저지하고, 북한과의 군사채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

미정부는 북한의 4자회담 참여는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 데 도움을 주면서 한반도 지역의 안정과 평화, 긴장완화,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돼, 중국적으로 한반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해 대북 영향력 유지 및 중국의 건설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회담에서 한반도문제의 조정자 또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한 남북대화,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남북 경제교류·협력 확대, 인적·물적 교류 등을 기대한다.

2. 4자회담 현황

미국이 미·북간 정치·군사·외교·경제적 안건들을 4자회담과 연계시켜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려 하는 것은 진정한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와 별도로 진전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 미·북, 남북관계를 동시에 진전시키고 별도의 다자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 실질적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자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우회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즉 한국을 앞세우고 미국이 후원하는 형태를 빌어 4자회담을 진전시켜 왔다.

4자회담이 제의된 이후 모두 10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진행도에 따라 3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시기인, 3차례의 초기회담(1997.3.5, 1997.4.16~21, 1997.6.30)에서는 4자회담 예비회담의 개최 문제를 주로 협의하였다. 둘째 시기인 3차례의 예비회담(1997.8.5~7, 1997.9.8~19, 1997.11.21)에서는 4자회담의 의제를 협의하였다. 셋째 시기인 4차례의 본회담(1997.12.9~10, 1998.3.16~20, 1998.10.21~24, 1999.1.18~22)에서는 분과위 구성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현재까지는 4자회담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4자회담 예비과정 및 본회담을 성사시키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미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미국은 물질적 지원을 원하는 북한을 상대로 상당한 인내심과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해 왔으며,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재개완화조치란 유인을 통해 북한의 4자회담 참여 및 이 회담의 성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4자회담의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3. 4자회담에 대한 한국, 북한, 중국의 입장

한국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 4자회담에서 남북한이 진지한 협의를 하고, 미국과 중국이 그 과정을 지원·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 안전보장, 신뢰구축, 평화협정 체결 등을 이루려 한다.

북한은 4자를 주역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남북한간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불가침 합의가 있지만 북·미간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기존 입장인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4자회담을 통해 남북한 화해, 미·북간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건설적 역할과 응분의 기여를 할 것이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4자회담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과 미·북간 일방적인 대화·접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의 4자회담 참여가 미국의 수단과 영향력을 통해 이루어졌고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이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4. 미·북간 협상 simulation에 의한 4자회담 전망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북한을 상대로 식량지원·경제제재완화조치 등의 수단을 통해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유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법을 통해 4자회담을 진척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4자회담 예비회담 및 본회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지원약속이나 대가보장에 대해 북한이 응하느냐 아니면 응하지 않느냐에 따라 4자회담의 진척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은 식량 및 의약품 지원, 경제제재완화조치, 달러제공 등의 협상수단과 함께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성사시키려 할 것이다. 이는 쉬운 것부터 먼저 협상하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방식은 4자회담에서 한국이 제시하고 미국과 중국이 동의한 것으로 미·북간 협상 역시 이에 근거하여 진행될 것이다.

미·북간 협상 simulation(step-by-step)은 「피라밋 협상 모델」에서 나타난다. 이는 8단계로 남북간 신뢰구축에 있어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로 진행된다. 미·북간 협상 simulation(comprehensive package)은 「미·북간 일괄타결 방안」에서 나타난다.

단계적 방식에 의한 미·북간 협상 simulation은 한국의 개입이 필요되는 반면 일괄타결에 의한 simulation은 미·북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은 미·북간 일괄타결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지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미·북간 수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역시 미·북간 일괄타결 방식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 긴장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놓고 미·북간 협상 simulation을 통해 내릴 수 있는 전망은 다음과 같다.

< 단계적 simulation에 의한 전망 >

전망 1: 1999~2000년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CBM) - 위기극복을 위한 고위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CBM1), 공동위기관리센터 설립 등 통신망 구축, 조기경보 확보 조치(CBM2), 군사훈련의 통보 및 대규모 기동훈련 제한(CBM3) - 까지 상승곡선을 타다가 2001~2003년간 하강, CBM이 후퇴하면서 2004년부터 CBM1, 2단계까지만 유지될 것이다.

< 일괄타결 simulation에 의한 전망 >

전망 2: 1999~2000년 북한이 대중동적성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을 중단하고 미국이 대규모 식량지원, 달러제공, 경제적 영역의 경제제재완화조치 등을 취할 것이다.

2001~2003년 북한의 핵동결 지연과 함께 남북한 긴장완화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절대 우세할 때 북한은 대중동적성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을 재개할 것이고 미·북관계는 경색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전망 3: 2004년 이후 북한이 핵동결을 완료하고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 및 중·장거리 미사일 생산 중단 그리고 생물·화학무기 생산 중단에 나선다면 미국은 대규모 식량지원, 달러제공, 전면적 경제재개원화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응한다면 미국은 미·북수교를 받아들일 것이고, 주한미군의 1, 2단계 철수를 감행할 것이다.

4자회담이 2001년부터는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긴장완화를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의 4자회담 전략에서 나타난다. 미국내에서는 4자회담 추진론자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미국측과 협의를 통해 제안한다면 4자회담의 기능 축소에 합의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예방과 미·북관계 개선에 있어 4자회담을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5. 한국의 대응책

4자회담과 관련 미국의 전략은 결여되어 있는 듯 하다. 미국은 4자회담 의제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때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어느 수준까지 진척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동결 일정과는 달리 4자회담의 종착을 일컫는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더구나 4자회담이 중단되어도 이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한·미·중이 4자회담에 의해 한

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란 목표를 달성하려 해도 북반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앞으로도 미·북간은 의제와 관련 '제의-반응'하는 형태로 4자회담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4자회담에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자회담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4자회담이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해 위기에 처하더라도 한국은 대북지원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등 비정치적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부적 차원의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에 따라 결정하고, 인도주의적 비정부적 차원의 지원은 4자회담과 연계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축으로 해야 한다. 넷째, 4자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상호불가침과 관련 국제적 보장장치기구로서 '교차불가침협정'을 맺어야 한다.

4자회담과 함께 한국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6자회담」(러시아와 일본이 추가 참여)보다 「4자회담」이, 「4자회담」보다 「3자회담」(남북한과 미국이 참여)이, 그리고 「3자회담」보다 「2자회담」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한반도문제에 관련국들이 많이 개입하면 할수록 그만큼 한반도 당사자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2자회담」(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한반도문제 당사자가 직접 모여 갈등·분쟁 해소방안을 논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자회담」의 성사 노력과 함께 한국정부는 「동북아 다자 협의기구」 창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참여국가간 경제·환

경·과학·기술 등 비정치군사적 사항을 협의·관리하는 기구다. 「동북아 다자 협의기구」는 포괄적 사항을 협의·관리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와는 다르다. 남북한은 이 기구의 틀내에서 대화·접촉의 폭을 넓히고 두만강 개발사업 및 동북아지역의 개발사업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출해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공동번영 및 긴장완화 그리고 냉전적 구조 청산을 지향해야 한다.

- 목 차 -

I. 서론	1
II. 미국의 4자회담 전략	4
1.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4
2. 억지와 개입	6
III. 4자회담 현황	10
1. 한·미 양국 정상외 4자회담 제의: 내용과 배경	10
2. 4자회담 추진과정: 미국의 주도적 역할	15
IV. 4자회담에 대한 한국, 북한, 중국의 입장	32
1. 한국	32
2. 북한	34
3. 중국	38
V. 미·북간 협상 simulation에 의한 4자회담 전망	43
1. 미·북간 협상 simulation(step-by-step)	43
2. 미·북간 협상 simulation(comprehensive package)	53
3. 미·북간 협상에 있어 성사 전망	57
VI. 결론: 한국의 대응책	81
참고문헌	89

I. 서론

한국전쟁이 끝난지 반세기가 가까워 오는 데도 한반도는 법률상 전쟁종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전쟁종결조치는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여전히 취해지지 않고 있다. 남북한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면서도 휴전선을 맞대고 긴장국면과 분쟁의 여한을 계속해서 안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의 휴전협정은 국제법이 생긴 이래 가장 장기간 잔존하고 있으며 휴전선이 합법적 경계선으로 바뀌지 않은 채 분쟁 상태를 이어 오고 있다.

한반도 주변환경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적 대결구도가 청산되었으며 신국제질서아래서 지역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국가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미·일·중·러의 대결구도 속에 놓여 있으며 미·중은 정전협정의 관련 당사국으로서 한반도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미·일·중·러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세력균형과 현상 유지에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연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한이 서로 대화·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여전히 대립·갈등의 구도속에 놓여 있으며 정전체제는 불안정하다. 북한의 정전협정 파괴움직임과 침략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북한은 폭력적 수단을 활용해 미국·한국과의

2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남북간 화해·협력 을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남북기본합의문과 북한핵문제 타 결을 위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저지시 키는데 일조할 뿐,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안전보장장치 구축을 위 해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1996년 4월 16일 한반도의 항 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남·북·미·중이 참가하는 4자회 담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김영삼 前대통령이 4자회담의 청사진을 구 상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지지하는 형태를 갖추 한·미가 공동 제의한 것이다.

4자회담은 한·미 양국이 주도하고 북한이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북한의 요구에 한·미 양국이 대응하는 형태였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 체결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4자회담에 부정적 자세를 취해 왔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4자회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여 왔 다. 한·미는 4자회담을 위한 공동설명회 및 3차례의 예비회담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식량지원 등의 수단을 통해 북한을 본회 담에 참여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동안 4자회담 예비과정과 본회담을 통해 한국의 역할이 북한의 반대로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다.

4자회담 예비과정 및 본회담에서 미국의 역할은 주도적이었다. 미 국은 식량지원 등 유인을 통해 북한을 4자회담에 참여시키고, 한국·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이 4자회담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미국은 미·북 대화채널과는 별도로 4자회담을 다자대화의 장 으로 활용,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이 지 역의 평화체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4자회담에서 미국의 실질적 역할을 감안할 때 4자회담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미국의 4자회담 전략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당면한 위기국면을 풀어나가려는 북한을 대상으로 구상·추진되는 것인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제II장은 미국의 4자회담 전략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대북 억지·개입의 전략과 연계해 검토하고자 한다. 제III장은 4자회담의 제의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동안 진행된 예비과정과 본회담 과정을 미국의 역할 중심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제IV장은 한국, 북한, 중국의 4자회담 입장을 검토하고, 제V장은 미·북간 협상 simulation을 바탕으로 미국의 가능한 선택을 전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VI장에서는 한국의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미국의 4자회담 전략

1.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미·북간 합의이후 미국은 두 개의 한국정책(Two Korea's Policy)을 펼치면서 미국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객관적·실질적으로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고, 남북한의 평화체제와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구상처럼 쉽지 않다. 미국은 “대체방안으로 조정·중재·화해, 국제법과 기구 그리고 비폭력 민간방어가 필요하다”¹⁾고 인식하고, 한반도에서의 조정·중재·화해 그리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안정,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측에 제의한 4자회담을 진전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한국과 함께 북한과의 평화회담을 진전시켜야 하며 냉전의 마지막 분단을 해소”²⁾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공세에 직면해 오면서 한반도 안전보장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은 한반도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 당사자 원칙 공세에 응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미사일 및 생물·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배

1) Carolyn M. Stephenson, “Alternative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s,” in *Alternative Methods for International Security*, Carolyn M. Stephenson, ed. (Lanham, New York,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pp. 23~34.

2) William J. Clinton, *The 1997 State of the Union Address, Speech delivered to the U.S. Congress* (Washington, D.C., February 4,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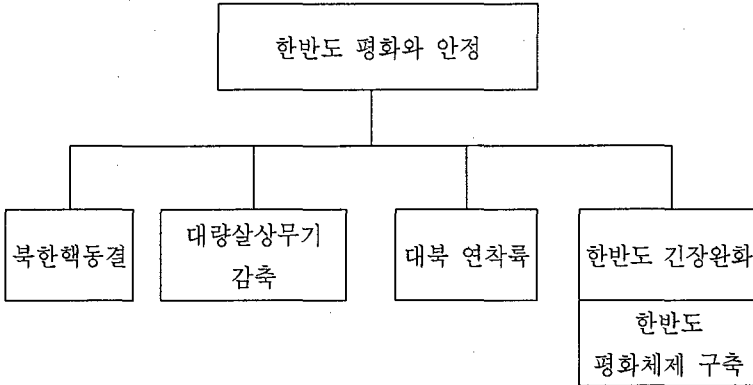
치해 놓고 있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화를 마냥 외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전협정 파기 기도에 대응하고 북·미 평화협정 공세에 맞대응하는 4자회담 제의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란 입장을 지지하고 남북간의 직접적인 평화협상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배제된 어떠한 형태의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개설, 실종 미군유해송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생물·화학무기 확산, 핵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정부가 한국정부와 협의과정없이 북한과 별도의 대화·접촉을 통해 한반도 긴장격하를 양산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자 한다.

요컨대, 4자회담은 장기적 차원에서 미국의 중요한 정책목표인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당사자간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증진³⁾시키는데 기여하고, 한국을 자극시키지 않으면서 북한과 별도로 쌍방간 걸려 있는 현안들을 협의하려는 의도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연착륙 등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함께 달성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도표 1> 참조). 또한 미국은 4자회담이 미·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 북한의 돌출행동을 억제할 수 있으며, 북한을 4자회담의 틀에 묶어 들으로써 북한의 핵동결 유지 및 정전협정 파기 기도를 저지하고, 북한과의 군사채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

3) Charles Kartman,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Pacific Affairs, Senate, July 8, 1997.*

<도표 1>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목표



2. 억지와 개입

클린턴 정부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한 전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의 우방국과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대해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확산을 전제로 한 개입과 확대, 지역분쟁의 해결, 무기경쟁의 지양, 상호신뢰구축 등에 대한 해결 방안 차원에서 지역협력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⁴⁾과 '지역위기 관리전략'⁵⁾의 기본 틀내에서

4)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5) 평시의 개입태세 유지, 분쟁시 신속대응, 미래의 위협대비에 관한 전략을 의미한다. Speech by William S. Cohen at the WAC on July 21, 1997.

모색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문제 역시 이들 전략의 기본 구도에 의해 풀어나가려 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며, '동맹국가의 생존보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무력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때까지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 정부는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 외화난, 배급제도 와해, 정보통제의 이완, 망명자의 증가, 사회혼란, 부정부패의 만성화, 지하경제와 물질주의의 확산, 군대규율 문란, 사상모순의 증대 등 몰락의 조짐이 있는 상태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전쟁의 재연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다. 미국은 군사적 충돌에 따른 재정적·물적·인적 지원에 따른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미군의 개입과 희생을 원치 않는다. 때문에 미국은 한·미 안보동맹체제 강화 및 '신축성있는 억지대안'(Flexible Deterrence Option)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려 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하에서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것은 한반도내의 미군 주둔과 미군사력의 전진배치가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은 이러한 억지력과 함께 북한에 통신 및 상호작용 통로를 열어 그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평양지도부에게 무력에 의한 상황탈출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을 주시시키고자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에 무력이 수반되지 않은 탈출구를 북한에 열어줌으로써 상호협력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 개입정책과 ‘연착륙’(soft-landing) 정책의 틀 안에서 4자회담을 지지한다. 미국은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기적 접근이라 본다.⁶⁾ 즉, 미국은 ‘개입과 확대’ 세계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그리고 지역협력 차원에서 4자회담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냉전기식의 억지력만 가지고 북한의 침략위험을 제거할 수 없고 억지력과 함께 지원 및 대화협력 그리고 신뢰구축 조치 등이 있어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총체적 위기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해 4자회담과 연계된 지원정책을 통해 북한을 살리고자 한다. 미국은 경제제재완화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일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중국적으로 북한이 덜 호전적·투쟁적이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한반도 지역의 전쟁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⁷⁾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고 한국과의 모든 차이 특히, 적대적 체제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그리고 “체제붕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난의 해결에 관건이 되는 서방으로부터의 다각적인 지원획득을 위해”⁸⁾ 북한이 4자

6) Speech by Stephen W. Bosworth to The Society for Unification Studies on “The Security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a Post-Korean Unification East Asia,” on December 30, 1998.

7) Kurt Cambell, *Hearing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Pacific Affairs,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February 26, 1997; Winston Lord,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Pacific Affairs,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March 19, 1996; Speech by James T. Laney to Asia Society Corporate Conference on “North and South Korea: Beyond Deterrence,” on May 11, 1996.

8) Mentioned by President Bill Clinton at US-Japan Joint Press Conference on April 25, 1997.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면 한반도 긴장 및 북한의 침략위협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4자회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미정부는 북한의 4자회담 참여는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 데 도움을 주면서 한반도 지역의 안정과 평화, 긴장완화,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돼, 중국적으로 한반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해 대북 영향력 유지 및 중국의 건설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회담에서 한반도문제의 조정자 또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한 남북대화로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남북 경제교류·협력 확대, 인적·물적 교류 등을 기대한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미·북관계와 남북관계가 함께 진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通美封南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4자회담의 기본 틀속에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채널의 폭을 넓혀 북한의 호전적·투쟁적 의지를 감소시키고, 4자회담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 및 추가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취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한다. 즉, 4자회담이라는 또 다른 대화채널을 통해 억지와 포용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각각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4자회담 현황

1. 한·미 양국 정상의 4자회담 제의: 내용과 배경

4자회담은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공세 및 침략위협 그리고 한반도문제에 있어 한국의 자신감 등을 배경으로 제의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한반도 주변환경은 한국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지역의 냉전적 구도는 지속되었지만 남북한의 유엔공동가입,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지원 약화, 한·러 및 한·중 수교 등은 북한의 국제적 입지를 상당히 약화시켰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한반도문제에 있어 주도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제네바 기본합의서 타결이후 미·북관계는 개선되었으나 남북관계는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미국은 성공적인 북한의 핵동결과 한반도 전쟁예방 차원에서 양측 관계개선을 모색해 왔다. 북한은 핵동결 및 한반도 안전보장을 미국과만 협상하려 할 뿐 한국과의 대화를 기피해 왔다. 남북대화는 미·북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국배제 전략하에 남북대화를 기피해 왔다. 심지어 미·북간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을 대상으로 침략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셋째,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등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켰고, 한국정부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정전체제 무력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군사정전위 북한측 요원을 철수시키고 1994년 5월 2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였다.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군정위 중국대표단」을 그리고 1995년 2월에는 「폴란드대표단」을 철수시키는 등 군사정전위를 무력화시켰으며, 5월 3일은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을 폐쇄조치하였다. 1996년 4월 4일에는 DMZ 무효화를 선언한 후, 5일부터 7일까지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넷째, 한국은 정전체제 전환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의 갈등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에 있어 항상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 및 한반도의 주변상황이 변했고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원칙을 중국·러시아 등이 지지함으로써 한국이 정전체제 전환문제에 자신있게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북한은 군사적 수단과 함께 침략위협을 계속해 왔다.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한미군과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이 동맹국 및 국내외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해 북한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때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그들의 군사적 수단과 침략위협을 교묘히 이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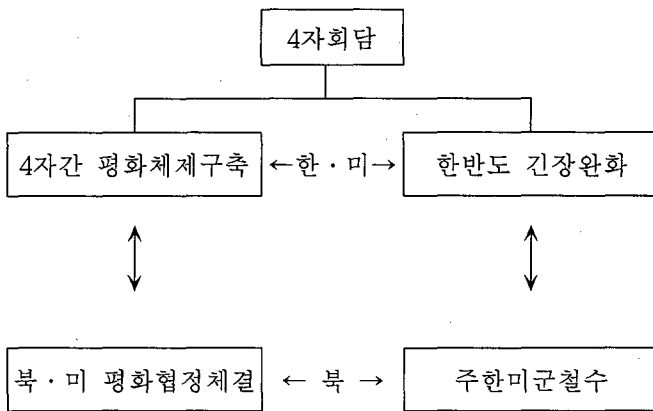
여섯째, 북한은 지난 1994년 남북 정상회담 예비접촉을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와의 공식접촉을 거부한 채 북·미회담만을 주장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을 공식회담장에 나오게 하고 결렬상태에 있는 남북대화의 회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지하듯이 한국정부는 붕괴론적 시각에서 고려된 대북 봉쇄·압박 정책에서 벗어나 평화공존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① 남북 당사자간 협의해결, ②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 ③ 남북간 합의사항 존중⁹⁾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모태로 4자회담을 제의하였다. 4자회담 제의는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반도의 미래는 우선적으로 한국인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본 원칙을 유지한다.¹⁰⁾

4자회담의 목적은 정전체제가 불안정하고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도표 2> 참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장치 구축의 일환에서 남북한이 주당사자가 되고 정전협정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 교전 당사국들 - 남북한과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중국 - 이 다자간 대화방식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체제구축, 신뢰구축 조치 등을 이룩하고자 한다.

<도표 2> 4자회담의 목적



9) 제50주년 광복절 기념사, 1995.8.15.

10) Speech by Laney on "North and South Korea."

4자회담은 두 방식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첫째, 「2 + 2」이다. 4자회담의 틀 안에서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미국과 중국에 의해 보장을 받는 것이다. 둘째, 「4 - 2」이다. 이것은 4자회담을 통해 회담의 의제나 운영방법을 개괄적으로 합의한 뒤 남북한 당사자가 중심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나중에 빠지면서 남북한이 관계진전 및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4자회담의 주 내용은 3원칙을 담고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문제와 미·북 양자간 교섭문제는 분리하며, 둘째,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이 앞장서지 아니하며, 셋째 미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직접 협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4자회담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문제와 미·북관계 개선을 분리함으로써 한·미관계의 분열을 노리는 북한의 의도를 차단하고 동시에 대북 정책과 관련된 한·미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¹¹⁾ 이로써 미국은 대북 접근의 범위와 폭이 확대되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4자회담은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남북한이 주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4자회담은 주의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당사자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한·미관계, 미·북관계를 분리시켜 여러 갈래의 쌍무협상을 가능케 하며 남북대화 연계라는 전제조건없이 미·북간의 대화접촉 및 관계개선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이로써 미국이 체내바 기본합의 사항인 남북대화를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대북 접

11) 최영관,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방안,"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 제6회 국제학술세미나, 1996.11.29), p. 112.

근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미정부는 북한과 미사일 협상 및 생물·화학무기 협상, 실종미군유해송환, 연락사무소 개설, 테러행위, 마약수출 등과 관련 한국정부와의 협의과정없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4자회담이 한·미 양국 정상에 의해 제의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New York Times*(1996.4.19)는 4자회담이 “김영삼 대통령과 공동으로 작성한 클린턴의 계획”(Mr. Clinton's plan, made jointly with President Kim Young Sam)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¹²⁾ 이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4자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회담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미국이 4자회담을 실제로 제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자회담 과정에 있어 미국의 주도적 역할은 보다 분명히 경험적으로 나타난다.¹³⁾ 첫째, 4자회담 제의후 북한을 회담에 나오게 한 주역은 미국이다. 미국은 대북식량지원과 같은 물질적 유인을 통해 북한

12) *New York Times*, November 17, 1996 보도는 4자회담이 클린턴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재언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김 대통령은 4자회담에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4자회담에 동의해 주어야 클린턴이 방한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4자회담 제안이 형식만 공동제안이지 실제로는 미국의 독자적인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한호석, “미국의 4자회담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논의』, 12호 (1996.5). 이와 관련 미의회조사국의 Niksch 연구원과 미국무부 북한담당관이었던 Quinones의 견해는 다르다. Niksch는 “정전협정에 대신하여, 남한을 배제한 채 미·북간 쌍무평화협정회담을 열 것을 요구해 온 북한의 노력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취한 최초의 외교적 대응”이다. 그럼에도 “그 제의의 이니셔티브와 실질적 내용들은 남한에 의해 취해진 것이다”고 하였다. Larry A Niksch, “미·북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민족통일연구원 제5회 국제학술회의, 1996.5.17), p. 68. 반면 Quinones는 4자회담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제로 제의되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것은 유종하 당시 외교안보수석의 정책안에 따른 것이었고, 미국은 4자회담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한국의 4자회담 제의에 동참해 주었다는 것이다. Interview with C. Kenneth Quinones on January 25, 1999.

13) 이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을 4자회담에 나오게끔 하였다. 둘째, 4자회담이 미·북간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회담을 지속시키고 있다. 셋째, 미국은 북한과 별도의 협상채널이 있어 4자회담을 반드시 전개해야 할 필요는 없다. 미국은 평양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현재보다 폭넓게 자유로이 미·북간 걸려있는 현안에 대해 논할 수 있다.

미국이 미·북간 정치·군사·외교·경제적 안전들을 4자회담과 연계시켜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려 하는 것은 진정한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와 별도로 진전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 미·북, 남북관계를 동시에 진전시키고 별도의 다자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 실질적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것은 한반도문제 해결은 “당사자에 달려 있으며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한반도의 양측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¹⁴⁾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자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우회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즉 한국을 앞세우고 미국이 후원하는 형태를 빌어 4자회담을 진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는 기독교윤리상 구원자라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미국이 한국이 원하는 4자회담을 도와주는 식의 ‘모양새 맞춤’으로써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미국이 수행하는 것을 말해준다.

2. 4자회담 추진과정: 미국의 주도적 역할

4자회담이 제의된 이후 모두 10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진행도에 따라 3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시기인, 3차례의 초기회담에서는 4자회담 예비회담의 개최문제를 주로 협의하였고, 둘째 시

14)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Briefing, April 8, 1996.

기인 3차례의 예비회담에서는 4자회담의 의제를 협의하였고, 셋째 시기인 4차례의 본회담에서는 분과위 구성에 대해 협의하였다.

4자회담 예비과정 및 본회담을 성사시키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미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미국은 물질적 지원을 원하는 북한을 상대로 상당한 인내심과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해 왔으며,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재개완화조치란 유인을 통해 북한의 4자회담 참여 및 회담의 성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4자회담의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가. 예비과정

북한은 한·미 양국 정상의 4자회담 제의 직후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통해 ‘현실성 여부 검토(4.18),’ ‘미국측의 설명 요구(5.7),’ ‘4자회담에 관심을 가질 근거가 없음(8.23),’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우선 논의(9.2),’ ‘4자회담 설명을 꼭 들어 볼 필요성 느끼지 않음(11.11)’ 등 일관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식입장을 일단 유보하였다. 이외 손성필 러시아 대사(4.16)는 “한반도의 신안보체제구축을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삼로 태국대사(4.17) 및 「로동신문」(4.16) 사설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고 한국은 개입할 자격조차 없다”는 언급을 통해 거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삼로 대사는 이번 제의는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평화협정에 한국을 읊서버로 참가시키는 문제를 미국과 예비회담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¹⁵⁾는 등 한국당국을 의도적으로 배격하는 태

15) 「로동신문」, 1996.4.16.

도를 보였다. 한편 당시 황장엽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은 “중국을 제외하고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이라면 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¹⁶⁾고 밝힌 바 있다. 요컨대, 북한은 한·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꺼내 4자회담에 대한 대답을 최대한 유보 또는 무산 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한·미는 북한이 「4자회담 공동설명회」(이하 「공동설명회」로 약함)에 먼저 참여하기를 촉구하였다. 공동설명회의 목적은 4자회담의 취지를 북한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동설명회에는 중국을 제외한 3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4자회담을 주도할 당사자가 남북한과 미국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미국은 ‘先공동설명회 수용, 後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을 공동설명회에 참여시키려 하였다. 반면 북한은 공동설명회 수용과 미국의 추가 대북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북한은 1997년 1월 27일 미국무부에 대해 “미 카길회사와 진행중인 곡물거래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어야 공동설명회에 응할 수 있다”¹⁷⁾는 입장을 밝혔고, 그 뒤 곡물거래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공동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 이에 미정부가 카길社와의 식량구매 협상에

16) 「毎日新聞」, 1996.8.16. 「3자회담」은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형태의 다자회담을 의미한다. 북한은 1978년부터 1987년까지 3자회담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2단계 3자회담」(1978.2), 「2원화된 3자회담」(1984.1) 「남북한과 미군사당국자가 참여하는 3자회담」(1986.6), 「남북한과 미의무장관이 참여하는 3자회담」(1987.8) 개최 주장이다. 이중 「2단계 3자회담」과 「2원화된 3자회담」제의 주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2단계 3자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먼저 협상을 하고 나중에 남한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북한은 베트남 평화협정 과정에서 미국이 북베트남과 핵심사안을 사전 협의·처리하고 나중에 남베트남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를 둘러리로 세운 전례를 모방해 2단계 3자회담을 제의했다. 「2원화된 3자회담」개최 주장은 한국전쟁 및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간 불가침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17)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5호 (1996.11~1997.12), p. 8.

서 상업적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을 내비쳐 공동설명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태도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형철 북한 미주국장과 민튼(Mark Minton) 미국무부 한국과장이 참석한 뉴욕접촉(1996.10.24, 30)에서 북한은 ① 공동설명회 개최 직후 준고위급 회담 개최, ② 준고위급 회담에서 4자회담 개최 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와 대북 경제지원책 논의, ③ 북한의 공동설명회 참석을 위해 미국 곡물회사인 카길社의 대북한 곡물 물물교환 허용 등 일부 경제제재 완화,¹⁸⁾ ④ 비정부기관이나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도록 할 경우 공동설명회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⁹⁾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미국이 국제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식량지원 참여를 발표하자 마침내 북한은 공동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① 잠수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고, ② 공동설명회 참여가 4자회담을 수용한다는 등식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으며, ③ 미국의 압력을 일축하기 힘들고, ④ 공동설명회 참여를 최대한 연기, 4자회담 수용여부 결정을 가능한 늦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공동설명회 참여를 결정한 것 같다.

남·북·미가 참여한 「공동설명회」(1997.3.5)는 주로 한·미가 4자회담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남측은 가급적 빨리 4자회담 본회담을 개최할 것과 회담의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회담의제로 제시하였다. 미측은 한

18) 북한은 1996년 봄 카길社가 제안한 미곡물회사의 대북한 곡물 상업판매를 미정부가 허용하고 미국 항공기의 북한 취항, 미국계 회사의 북한 광업에 대한 투자 허용 등 부분적인 경제제재를 완화할 경우 4자회담을 위한 공동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미국에 밝힌 바 있다. 「한겨레신문」, 1996.11.4.

19) 「동아일보」, 1996.10.25; 「경향신문」, 1996.10.26; 「한겨레신문」, 1996.11.4.

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미·북 제네바 합의문을 기초로 개시되기를 바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미·북간 협상이 아닌 남북한이 직접 논의할 것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협정의 서명당사국인 중국의 참여가 긴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한·미는 동맹관계를, 한·중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비해 북·미관계는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못한 상태로 4자회담에서 북한이 불리하고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라 지적하면서 4자회담 참가시 북한의 동등한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북한은 남북간 불가침 합의가 있으므로 북·미간 평화협정²⁰⁾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북한이 4자회담 참가 조건으로 100~150만톤 정도의 식량 지원과 경제제재완화조치를 미국에 요구하였다. 한·미의 조건없는 개최주장으로 북한의 요구가 거부되자 3차 설명회 후속회담, 4자회담 예비회담, 본회담 등 단계별 회담에 앞서 각기 10만, 50만, 90만톤의 단계별 지원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²¹⁾

공동설명회이후 처음으로 가진 남·북·미의 3자접촉(1997.3.27)에서 북한은 어려운 북한의 식량난을 호소하면서 한·미가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경우 4자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4자회담과 식량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북외교부대변인의 주

20) 북한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10년 단위(1974년 3월 25일, 1984년 1월 10일, 1994년 4월 28일)로 해왔다. 북한의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제의는 한국전쟁 및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부터 기인된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이미 북한에서 철수하였으므로 실질적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주장도 포함된다. 「북남간 평화협정」 체결 제의와 다른 점은 「북·미간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난 뒤 미군철수를 이행하는 것이다.

21) 「내외통신」, 1997.5.15.

장²²⁾과는 다르며, 오히려 이들은 직접 연계시켰다. 보다 분명히 한성렬 유엔주재북한대표부공사는 4자회담전에 150만톤 정도의 식량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³⁾ 한국정부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한국에 식량지원을 공개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한·미 양국은 4자회담 참석을 조건으로 하는 식량제공의 사전 보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정부적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은 본회담 개최후 신뢰조치 등 구체적 현안진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어진 「공동설명회 후속협약」(1997.4.16~21)에서 북한은 4자회담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면서 본회담 개최와 대규모 식량지원 및 경제제재완화조치, 법적·정치적 지위해결을 위해 대미 외교관계 수립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²⁴⁾ 북한이 미국과의 국교수립을 요청한 것은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으나 4자회담과 연계한 점은 의외였다.

식량지원 방식에 있어 북한은 먼저 3자가 식량지원과 대북 경제제재해제 문제를 논의한 뒤 중국을 참여시키자는 「3 + 1」 방식을 제의하였다. 북한이 한·미 양국으로부터 식량지원확보와 경제제재완화라는 목적을 충족시킨 뒤 4자협의로 진행하자는 일종의 단계적 전술이다. 또한 회담을 1단계 더 늘리고자 하는 전술로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3 + 1」 방식을 적극 반대하고, 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북한은 이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공동설명회 후속협약이 종료된 후 남·북·미 3자 실무대표(1997.5.30~6.28)들은 4자회담 개최와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논의하였다. 북한

22) 북외교부대변인, 「중앙통신」, 1997.4.12.

23) 「한국일보」, 「조선일보」, 1997.3.28.

24) 「讀賣新聞」, 1997.4.18.

측은 '先식량지원, 後회담개최'를 되풀이하였고, 이 주장을 한·미 양국이 일축하였다. 평양측은 先식량지원 주장이 한·미 양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비회담 개최가 지연되는 상황이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4자회담 예비회담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차관보급 3자협약」(1997.6.30)는 3자 실무대표간 협의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 협의에서 북한은 대규모 식량지원 외에 ① 미·북 외교관계 수립, ② 주한미군 철수, ③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해제 등을 요구하였다. 북한의 요구에 대해 한·미 양측은 4자회담의 틀속에서 그러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대응하였다.²⁵⁾ 이 협의에서 3자가 합의한 내용은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 예비회담을 8월 5일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4자회담 1차 예비회담」(1997.8.5~7)에서 의제와 관련 남북간 마찰이 빚어졌다.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라는 포괄적인 의제를 제의하였고, 미국이 이에 동의한 바 있다. 반면 북한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제 수립'이라는 의제 밑에 세부의제로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으로부터의 미군철수,' '조미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내 무기반입 금지' 등을 포함하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중국측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관련 각측 관계개선 문제'라는 두 개의 포괄적인 의제를 제의하였다.²⁶⁾ 의제문제로 인해 4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그들은 다음 예비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이 본회담 참여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에게 먼저 150만톤에 달하는 식량지원 약속을 요구하고 한·미가 '先회담, 後지원'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었다.

25) 「讀賣新聞」, 1997.7.1.

26) 「남북대화」, 제65호, p. 19.

그 이후 북한은 미국이 북한측의 회담참가만으로는 경제제재가 해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이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미국측에 대해 미·북 기본합의문의 2조1항을 거론하며 그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부당한 제재소동으로 하여 조-미 기본합의문 이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²⁷⁾고 미국에 경고하면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완화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2차 예비회담」(9.18~19)은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와 그의 형 장승호 파리주재 무역대표부 참사관 일가족의 미국망명 건으로 회담개최가 다소 불확실해진 상태였다. 그러나 평양측이 4자회담 자체를 결렬시키는 것이 무리라 판단, 2차 예비회담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 회담에서 4자는 본회담 개최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1차 예비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의제선택에 있어 의견이 충돌해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한국측은 예비회담에서 세부의제 설정을 논의하게 될 경우 이 회담이 길어질 수 있다면서 본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에 관한 제반 문제’라는 포괄적 단일 의제를 채택할 것을 재차 제시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제시에 동의하였다. 반면 북한이 先식량지원, 주한미군 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 세부의제와 ‘북남이 외부로부터 일체의 군사장비 도입을 금지하는 문제’²⁸⁾를 추가 제시하는 등 의제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해결의 의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회담이 종료되었다.

북한이 본회담 참가조건으로 요청한 식량지원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정전체제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며 본회담 참가를 수락할 경우 매월 10만톤 정도의 식량을 제공”하며, “본회담 개최와 함께 대규모 식량지원에 나선다”²⁹⁾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7) 「로동신문」, 1997.8.8.

28) 통일원, 「4자회담 개최 관련자료」(1997.12), p. 4.

북한은 미국이 “회담에서 식량을 무기로 우리(북)에게서 정치적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³⁰⁾면서 이를 비난하고 미국측이 대북 식량지원과 4자회담을 연계시키려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한·미 양국의 제안은 북한의 본회담 수락과 대북 식량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양국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만 양국이 대북 식량지원과 예비회담의 쟁점사항인 주한미군 문제를 철회하도록 하려는 일괄타결을 위해 안을 내놓은 것 같다.

2차 예비회담에서 본회담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4자회담과 관련된 회담이 불확실해졌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트만(Charles Kartman) 국무부 부차관보가 “더 이상의 예비회담은 무의미하다. 본회담 수락여부를 확실히 정한 뒤 알려달라”³¹⁾는 최후 통보를 전하자 평양측은 태도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마지못해 「4자 실무협약」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근 駐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와 민튼 미국무부 한국과장은 10월 21일 비밀접촉에서 11월 셋째주 3차 예비회담이 성공할 경우 12월 둘째주에 본회담을 개최한다고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한측은 그동안 주장해 오던 세부의제 대신에 의제를 일반화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접촉에서 이근 대사는 先식량지원 요구와 주한미군 문제의 의제채택 포기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치면서 대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북·미관계의 전반적인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4자 실무협약에서 의제 일반화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은 「제3차 예비회담」(1997.11.21)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에 관한 제반 문제’를 의제로 삼자는데 동의하였다. 미국과

29) 「중앙일보」, 1999.9.19.

30) 북외교부대변인, 「중앙통신」, 1997.9.21.

31) 「중앙일보」, 1997.10.25.

중국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의제문제가 타결되었다. 또한 이 회담에서 4자 수석대표들은 1997.12.9 제1차 본회담을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본회담 참가결정에 미·중 양국정상이 정상회담(1997.10.29)에서 북한의 4자회담을 수락할 것을 강력한 의지로 촉구³²⁾한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요청에 중국이 협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인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북한지도자들에게 4자회담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했다.³³⁾ 과거 북한의 핵위협을 무산시키는데도 미·중이 협력해 왔던 전례와 같이 이번에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였다. 미·중 정상회담 직전 중국이 4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陳健 외교부 부장조리를 평양(10.25~11.1)에 보내 실무협상을 가지게 한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평양측은 미·중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할 시 이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

홀(Tony Hall) 미하원의원의 방북(10.14~17), 미정부 식량대표단의 방북(10.25~11.4), 미국의 의약품 지원(5백만 달러상당) 등 본회담 개최분위기가 조성된 점도 북한의 본회담 참가결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북한의 본회담 참가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항을 살펴보면, ① 김정일 당총서기 취임(1997.10.8)이후 북한이 평화이미지를 과시하려 했고, ② 한국의 정권교체 과도기에 4자회담에 참여함으로써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 했고, ③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지원확보와 대미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난 해결 및 특구투자 활성화를 달성하기

32) 이와 관련 북한은 “오히려 좋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4자회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외통신」, 1997.11.5.

33) *Christian Science Monitor*, October 30, 1997.

위해서였다.

한편 북한의 4자회담 본회담 참여는 다른 측면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북한은 미국이 WFP를 통해 식량 100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비공개적으로 약속함에 따라 본회담 참여를 결정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³⁴⁾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이 투명성이 상실된 채 비밀주의의 속성에 따라 움직여왔다고 볼 수 있다.

나. 4자회담 본회담

평양측은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침략위협을 통해 4자회담 참여 대가를 얻으려는 전략을 모색했고 '先식량지원, 後회담참여'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심지어 북한외교부 관리들은 방북 미상원의원들에게 식량지원을 제공받지 않은 채 4자회담에 참석할 경우 군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모른다³⁵⁾는 암시를 하면서 先식량지원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한·미가 4자회담 성사를 위한 견고한 공조체제를 보이고 본회담이 개최되어야 대규모 식량지원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해 북한은 先식량지원 요구를 중지하고 본회담 개최에 동의하였다.

「1차 본회담」(1997.12.9~10)은 한국전쟁이후 전쟁 당사자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처음으로 외교적 대화의場に 참여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회담에서 한국은 남북한이 중심이 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주

34) *Washington Post*, November 25, 1997.

35) *Asia Wall Street Journal*, April 2, 1997.

장을 펼치면서 남북당사자 원칙 존중,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강구, 남북기본합의서와 군사정전협정 등 기존합의의 준수 이행,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의 상호주의에 바탕한 점진적 협의 이행,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 구성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³⁶⁾

한편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제차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문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과정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하고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측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북한의 안보 위협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북측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일축하였다.

북한측은 미국의 아태지역 기본전략하에 주일미군·주한미군의 철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4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제재완화조치, 북·미관계 개선 등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은 한·미 안보결속과 한국내 안보결속감을 흔들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상태의 지속은 남북한 및 아시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정전체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미국측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4자회담의 틀안에서 상호 단계적 관계개선과 신뢰강화 등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미·북관계도 함께 개선

36) 『남북대화』, 제65호, p. 26; 『세계일보』, 1997.12.10.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의제선정과 관련, 한·미 양측은 합의한 의제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분과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고, 반면 북한측은 분과위 구성보다는 본회담 의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상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갖자고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통적으로 남·북·미·중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이 일순간에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노력하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아울러 4자는 참여국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4자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하는 특별소위원회를 2월중순 북경에서 개최하고 제2차 본회담을 1998년 3월 16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차 본회담」(1998.3.16~20)에서는 주한미군과 분과위 구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미국이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 문제는 본격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차이가 있었다. 분과위 구성 문제와 관련, 북한은 이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나, 분과위에서 다룰 의제들을 먼저 결정하자고 한 반면, 한·미는 평화체제 분과위, 긴장완화 분과위를 먼저 구성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북한 외교부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4자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면서 “회담이 공전된 것은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북남회담을 4자회담과 뒤섞어 놓고 조선문제를 국제화해 우리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한 틀거리(구실)를 만들어 보려는 미국의 기도와 관련된다”고 주장했다.³⁷⁾

북한과 한·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일보의 양보가 없자 2차 본회담은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심지어 3차 본회담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끝나 버렸다. 결국 4자회담은 본회담 개최와 정전협정 이후 전쟁참여국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문제를 의논했다는 의미 그 자체만을 남긴 것 뿐이었다.

「3차 본회담」(1998.10.21~24)에서 4자는 2개의 분과위 구성·운영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는 분과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 때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회담까지 1개 분과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중국이 3차 회담 초기 “다수가 원한다”³⁷⁾는 이유를 들어 한·미의 2개 분과위 구성에 지지를 보내었다. 또한 분과위 작업에 지침이 될 ‘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도 채택되었다. 분과위 각서작성은 4자간에 합의된 사항이 실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합의내용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어려운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분과위 각서작성은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분과위 구성 역시 미국의 노력과 역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뉴욕고위급회담에서 분과위 구성을 위한 북한의 동의 및 영변부근 지하시설의 사찰문제를 협상으로 푸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밀 30만톤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 합의를 이끄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양보가 아닌 합의사항 이행이란 명분을 걸고 분과위 구성에 동의했다. 이 합의는 북한이 그동안 고수해 왔던 ‘先의제선정, 後분과위구성’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북한이 미국의 중유제공 및 경수로 본공사 개시 등의 합의사항에

37) 「내외통신」, 1998.3.24.

38) 「조선일보」, 1998.10.23.

압박을 가하고 식량지원 및 경제적 실익을 얻고자한데서 비롯되었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의 입장 고려와 함께 대화의 틀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로켓발사체 문제와 건설중인 지하핵시설 의혹 등으로 악화된 미국내 대북여론을 의식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려 한 점³⁹⁾ 역시 태도변화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북한이 제의한 주한미군 철수문제의 의제화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⁴⁰⁾ 북측은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⁴¹⁾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재차 주장했다. 미측은 주한미군 철수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단호히 했으나 점차적으로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면서 남측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의제에 올려놓고 협상을 벌일 수 없다”⁴²⁾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양측은 한반도 군비축소를 채택하고, 그 안에서 북한군·한국군·주한미군 등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군사력의 동시감축 문제를 병행 논의할 수 있고, ‘긴장완화 문제’를 다루는 분과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북한을 회유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북측의 미군철수론을 사전 봉쇄하면서 남북 동시군축을 위한 우회카드로 볼 수 있다.

「4차 본회담」(1999.1.18~22)은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분과위 명칭 및 의

39) 민족통일연구원, 「북한동향」, (1998.12), p. 93.

40) 한·미양국은 합의문에 ‘미군’이라는 표현을 적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미군철수’라는 용어를 명기하거나 최소한 미군문제의 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진통을 겪었다. 또한 미국이 한국과의 합의에 따라 ‘한반도 전체의 군사력 감축’이나 ‘한반도의 외국군 지위문제’ 같은 표현으로 주한미군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 북한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1998.10.23; 「문화일보」, 1998.10.24.

41) 「세계일보」, 1998.10.23.

42) 「중앙일보」, 1999.10.26.

제 설정과 함께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했었다. 그러나 분과위 운영절차와 다음 4자회담 개최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의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남측은 긴장완화 분과위에서 남북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주요 군사훈련 상호통보, 군 인사 상호교환 방문 등 군사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우선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⁴³⁾ 즉,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부터 협의하기 시작해 장기적으로 군축문제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다. 미·중 양국도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이라며 남측 제안을 지지했다. 또한 평화체제의 분과위에서 평화체제의 형식 및 내용이 논의되기를 희망하였다. 반면 북측은 미군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처럼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교환을 시도했지만 4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한 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대신 4자는 앞으로 분과위 운영과정에서 규칙 역할을 할 운영절차, ① 분과위의 의사결정은 전원 합의, ② 분과위 미결정 사항은 수석대표회의에 회부, ③ 분과위 회의결과의 전체회의 보고는 서면으로 함, ④ 분과위에서 자유의사 개진⁴⁴⁾ 등 4개항에 합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4개항은 분과위 운영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를 시비거리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은 4자회담 전야에 발생한 김경필 독일 주재 북한외교관 부부 망명사건을 계기로 진통을 겪었다. 북측은 납치로 단정짓고 한·미가 긴장을 격화시킨다고 간주하고 이를 문제삼아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북측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43) 박건우 한국측 수석대표 4차 4자회담 기초연설, 1999.1.19.

44) 『문화일보』, 1999.1.22; 『경향신문』, 1999.1.23.

근본 원인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⁴⁵⁾으로 몰아세우면서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한·미로 전가한 바 있다. 미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제네바협정에 따라 증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슨 대북 적대정책이나”⁴⁶⁾ 하면서 북한을 공박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미국을 몰아부치면서도 분과위 운영절차 문제에 대해 토의를 이끄는 등 4자회담의 판을 깨지 않으려 했다. 북측의 이러한 태도는 목전에 둔 북·미회담을 의식, 실리를 위해 목청을 낮추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자신들에 불만스런 상황이 있더라도 트집을 줄이고 대화에 성의를 다한다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려 하였다.

45) 김계관 북한측 수석대표 4차 4자회담 기초연설, 1999.1.19.

46) 「동아일보」, 1999.1.21.

IV. 4자회담에 대한 한국, 북한, 중국의 입장

1. 한국

한국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선 “당사자인 남과 북이 중심이 돼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미국, 중국이 실효성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⁴⁷⁾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4자회담에서 남북한이 진지한 협의를 하고, 미국과 중국이 그 과정을 지원·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평화체제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바란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개입시킴으로써 당면적으로 북한의 폭주나 급격한 붕괴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본다.⁴⁸⁾ 또한 한국은 북한을 다자간 협의의 장에 넣어 남북간 직접 대화를 유도하고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 안전보장, 신뢰구축, 평화협정 체결 등을 이루려 한다.

한국정부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남북한이 논의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함한 모든 합의사항이 지켜질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남북한이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평화상태를 이룩하기 전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의 내용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또한 이 합의서에 명시된 무력불사용 및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의 경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무력충

47) 이시영 1차 4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기초연설, 1997.12.10.

48) 『産經新聞』, 1997.8.5.

돌 방지,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용 등이 실천에 옮겨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한국은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수립이 4자회담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은 정전협정 유지와 평화상태로의 전환과정에서 남북한이 주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협의·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는 아니지만 한국전쟁의 실질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당사자 원칙을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고 있어 4자회담에서 남북한의 핵심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본다. 4자회담에서 남북한이 회담운영과 실질적 문제를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원 역할을 하면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은 실제로 가능하다.

한국은 미·북간 정치군사적 접촉에 의해 기존의 정전협정이 북·미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심지어 한국은 북·미간 휴전협정 대체 회담이 열려서도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한국이 우려하는 것은 판문점 장성급대화가 복원되면 북한이 이를 미·북간 장성급대화로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휴전협정 대체 회담을 미국에 제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철저히 저지하고자 한다.

이외 4자회담은 한국에 있어 ① 기본합의서의 취약부분인 평화체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고, ② 북한의 협상술을 공식적 회담의 틀속에서 파악할 수 있고, ③ 다자간 대화의 장에 북한과 사회주의 동맹국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④ 미·북관계의 향방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정경분리원칙을 추진하면서 4자회담이 남북대화 및 관계개선과 조화와 병행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4자회담, 남북대화, 남북정상회담, 기본합의서 실현을 위한 특사교환 등과 남북경제교류·협력 등이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 문제만을 다루고 정경분리 입장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4자회담과는 별도로 남북대화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한반도문제의 한국화를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4자회담과 관련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정경연계 정책과 다른 것이다.

4자회담은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협정 체결 이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북간 회담이 무방함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미·북관계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미·북관계의 진전이 남북대화 및 관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4자회담이 개최되면 남북간의 직접대화가 가능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 논의 및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4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외면해 한국이 의도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이 通美奉南 정책을 계속해서 모색해 미·북관계개선이 남북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2. 북 한

북한은 4자회담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논의하자는 회담으로서 우리의 안보이익에 부합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⁴⁹⁾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북한은 4자회담 구도에 따라 한국전쟁의 실질적 교전당사자 전원이 참여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4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익(absolute gains)보다는 한국과 중국을 배제시킨 채 북한이 인식하는 실질적 위협의 근원인 미국과의 쌍무간 협정을 통한 이익(relative gains)을 선호해 왔다.⁵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함께 4자회담을 제의했다는 그 자체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4자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참여하는 형태의 평화협정 체결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북한은 유엔사령부, 중국, 북한이 휴전협정에 서명했고 한국은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4자를 주역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남북한간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북한은 “오늘 조선반도에서 미국 호전세력과 남조선 괴뢰도당에 의해 군사정전체제가 마비상태에 처해 있는 실태는 무력증강과 전쟁재발을 막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⁵¹⁾ 휴전협정을 평화기제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화기제’는 휴전협정과 유엔군 사령부를 핵동결 합의에 따른 우호관계에 부합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⁵²⁾ 따라서 북한은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전제조

49) 북외교부대변인, 「중앙통신」, 1997.4.12.

50) 김용호, “북한의 대미접근과 4자회담 전략,”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민족통일연구원 제7차 국제학술회의, 1997.4.15), p. 64. relative gains와 absolute gain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David A. Baldwin, “Newliberalism, Neorealism, and World Politics,” in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David A. Baldwin,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 5~6 참조.

51) 「내외통신」, 1997.6.25.

52) Selig S. Harrison, “미국의 대북정책과 4자회담,”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민족통일연구원 제6회 국제학술세미나, 1996.11.29), p. 19.

건으로 새로운 평화기제, 즉 북·미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란다.

북한은 한국과는 이미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으므로 남북문제는 별도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⁵³⁾는 입장을 취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4자회담이 아닌 북·미간의 협상을 통해 성사되기를 바란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불가침 합의가 있지만 북·미간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기존 입장인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⁵⁴⁾ 그러면서 북한은 1996.2.22 미국에 「잠정협정」⁵⁵⁾ 체결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미국에 의해 거부되자 「북·미간 상호안보협의체」⁵⁶⁾ 구성을 주장하였다. 요약하면, 북한은 북·미간 「평화협정」 및 「잠정협정」 체결 그리고 「3자회담」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제의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호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의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제의는 일관된 것이라기보다 대안적 제의라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제의들을 통해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려 한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국으로부터 국가생존과 안전을 보장받고자 한다. 북한은 미

53) 「每日新聞」, 1998.3.27.

54) 「남북대화」, 제65호, p. 11.

55) 그동안 제안된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북한은 미국에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잠정협정」이란 평화협정체결 이전의 과도적·단계적 조치에 해당되며, 무장충돌과 돌발사태에 대한 해결방안과 군사정전위를 대신할 북·미공동군사위 조직·운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 무진의 협상이다. 이것은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을 미국의 종속적 존재로 부각시키면서 한반도 군사문제에 미국과만 상대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56) 미국이 정전협정의 유효성과 남한을 배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의 잠정협정 체결 주장을 거부하자 북한은 「북·미간 상호안보협의체」 구성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정세는 정전체계의 파괴로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로동신문」, 1996.7.27)고 지적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정전상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북·미간 합법적인 군사적 접촉창구를 설치하고 고위급 정치군사협상을 먼저 시작할 것을 제의하였다.

국과의 적대관계가 청산되면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주둔하더라도 이들을 적이 아닌 '평화유지군'⁵⁷⁾으로 간주할 수 있고 미국을 다른 시각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남북간 조정자, 완충자의 역할을 균형있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두 개의 한국정책의 틀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며 4자회담에서 미국과의 신평화보장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를 미국으로부터의 대북 식량지원 및 경제제재완화조치와 연계시키려 한다. 북한이 4자회담에서 거론된 의제를 수용하면 미국·일본·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식량지원을 얻을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추가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실질적 대미 접근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서방세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더불어 북한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국제적으로 선전할 수 있고, 북·미 대화와는 별도로 또다른 협의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의 손실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의 한국 인정과 한국배제정책 노선에 차질이 생기며 주적 개념이 상실할 수 있다. 이로써 通美奉南, 先美後南 정책 및 대미접근 전략도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반대하는 군부 강경세력들의 반발을 무마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발로 비롯된 내부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일단 4자회담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 있어 남북한이 직접적인 당사자

57) 이와 관련 아태평화위 이종혁 부위원장은 「떠오르는 남·북·미 3각관계」, (미조지아대 세계문제연구소센터 학술회의, 1996.4.29)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미군 주둔 자체가 아니라 군사훈련과 같은 구체적 행동”이라 지적하면서 “주한미군의 평화유지역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외통신」, 1996.5.16.

가 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 및 4자회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양측은 미국이 4자회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신포 경수로사업이 협상과정 초기에는 미국 주도로 진행되다가 점차 한국 주도의 KEDO가 나섰던 점을 우려하면서 4자회담에서는 미국이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4자회담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을 연계시켜 한국의 지원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는 것처럼 해 한국을 미국의 종속적 존재로 계속해서 부각시키려 한다.

이외 북한의 미국역할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과 기대를 안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북한이 직면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위기 극복에 미국이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상대함으로써 한국을 계속해서 주적과 미국의 식민지로서 취급할 수 있다. 셋째, 通美奉南 전략을 지속할 수 있다. 넷째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계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대화채널을 가동시켜 관계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다.

3. 중 국

중국은 한·미 정상이 제의한 4자회담에 대해서 이 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모두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4자회담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⁵⁸⁾는 입장이다. 중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서 평화체제 형성에

58) 『朝日新聞』, 1997.12.10.

당연히 참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미·북간의 대화접촉과 서로를 교섭상대로 여기는 상황에서 중국이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에 참가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남북한 쌍방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입장을 최대한 이용해 한반도 안정화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생각이다.⁵⁹⁾

중국은 4자회담을 통해 남북한 화해, 미·북간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을 지지하며,⁶⁰⁾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건설적 역할과 응분의 기여를 할 것이란 의지를 밝힌 바 있다.⁶¹⁾ 특히 한반도 문제의 해결원칙에 대해 평등, 상호존중, 내정불간섭원칙에 따라 남북대결구도를 먼저 종식시켜야 하며 자주적인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⁶²⁾ 이는 한국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적용해 온 남북한 상호체제 인정,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원칙과 같은 기본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남북화해와 미·북 관계개선을 동시에 지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한·미 양국과의 공통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인 남북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⁶³⁾ 이는 한·미 양국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관련 당사국 모두가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도 한·미 양국의 주장과 같다. 다른 점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주변국들이 개입하는 순서를 거치자는 것이다.

59) 「讀賣新聞」, 1997.8.8.

60) 「讀賣新聞」, 1997.8.8.

61) 「朝日新聞」, 1997.12.10.

62) 「중앙일보」, 1997.12.10.

63) 錢其琛 前외교부장은 헤이그에서 개최된 미·중 외무장관 회담(1996.4.20)에서 4자회담과 관련,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4자회담을 제의하게 된 목적이 “한반도에서의 패권적 지위 확보 및 중국경제”⁶⁴⁾에 있다는 중국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중국은 4자회담에서 미국의 역할을 가능한 제한하고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북한의 입장과의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과 같고, 미·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북한과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국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4자회담을 계기로 지역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협조자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증대에 우려를 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중국은 한반도를 중·미간 영향권의 완충지대로 여기면서 미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억지하고자 하였다.⁶⁵⁾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이 한반도의 현상태를 크게 변화 혹은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며 통일된 한국이 친중국 성향을 지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적어도 반중국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⁶⁶⁾ 아울러 중국의 기본인식은 미국의 군사력 진출이 중·북한 국경인 압록강에까지 이르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완충지대인 북한을 잃으면 유일

64)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20.

65) Samuel S. Kim, “The Emerging Northeast Asian Order and the Chinese and Russian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11th U.S. Forum, Arlington, Virginia, August 1995, pp. 18~20.

66) 최춘흠, “한반도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한·중 학술서울회의, 1997.7), p. 4.

초강대국 미국과 강 하나만으로 접한 상태가 되어 안보면에서도 결코 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⁶⁷⁾

따라서 중국은 4자회담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과 미·북간 일방적인 대화·접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의 4자회담 참여가 미국의 수단과 영향력을 통해 이루어졌고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이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과 국교수립 및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후견역을 끝까지 맡기가 어렵고, 미국을 대신 하여 한반도 전체의 조정역을 맡을 위치에 있지 않는 중국이지만 한반도문제에 있어 입지축소를 바라지 않으며, 미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주도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아울러 중국은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과정과 관련 다음과 같은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대외정책의 핵심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구상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

둘째, 중국은 4자회담이 참가국의 평등한 참여에 의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한다.

넷째, 중국은 '이견을 덮어두고 공통점을 지향한다'는 원칙아래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자세를 보이려 한다.⁶⁸⁾

67) 「産經新聞」, 1997.8.5.

68)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pp. 27~31.

또한 중국은 남북한간의 진정한 화해와 내부정세 안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남북한이 상대방 정부가 곧 붕괴될 것이란 결론하에 붕괴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서는 안되고, 상호비난 자제와 함께 상대방의 내부정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상호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⁶⁹⁾

69) Zhou Xing-Bao, "China's Perspectives and Position about the Proposed 'Four-Party Talks',"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민족통일연구원 제7차 국제 학술회의, 1997.4.15), pp. 38~47.

V. 미·북간 협상 simulation에 의한 4자회담 전망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북한을 상대로 식량지원·경제제재완화조치 등의 수단을 통해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유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법을 통해 4자회담을 진척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과 함께 본 장은 미·북간 협상을 simulation 하고자 한다. 4자회담 예비회담 및 본회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지원 약속이나 대가보장에 대해 북한이 응하느냐 아니면 응하지 않느냐에 따라 4자회담의 진척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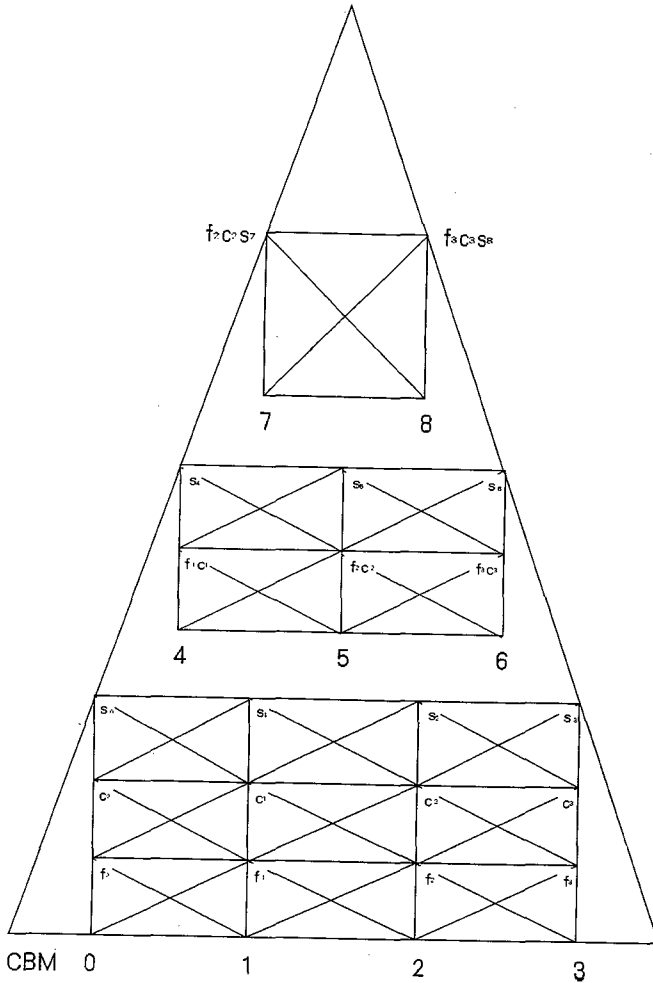
1. 미·북간 협상 simulation(step-by-step)

4자회담에서 한·미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반면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이 논의·성사되는데 주력해 왔다. 미국은 정책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벌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단계적이기 보다는 일괄타결⁷⁰⁾에 의해 성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절에서는 남북한

70) 4자회담에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제네바 기본 합의와 달리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은 미·북간 합의사항이 아니다. 둘째,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양보가 없는 한 성사되기 힘들다. 셋째,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부재하다. 넷째, 북한이 4자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와 대규모 대북지원, 경제제재완화조치 완전 이행, 엄청난 액수의 현금 등을 미국에 요구할 때 미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4자회담을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다섯째, 미국의 대북 식량·약품 지원은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주의적 이유에서 계속될 수 있다. 여섯째, 미국은 북한이 핵동결 합의를 완료할 경우 경제제재조치들을 해제하기로 약속했다. 일곱째, 부시 정부 때 주한미군의 3단계 철수계획안이 마련된 전례와 같이 차기 미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의 향방에 따라 주한미군의 점진적·단계적 철수는 가능하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대상으로 미·북간 협상 simulation을 진행하고자 한다.

<도표 3> 피라밋 협상 모델



미국은 식량 및 의약품 지원, 경제체재완화조치, 달러제공 등의 협상수단과 함께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성사시키려 할 것이다. 이는 쉬운 것부터 먼저 협상하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방식은 4자회담에서 한국이 제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동의한 것으로 미·북간 협상 역시 이에 근거하여 진행될 것이다.

미·북간 협상 simulation(step-by-step, 이하 SBS)은 「피라밋 협상 모델」(<도표 3>)에서 나타난다. 이는 8단계로 남북간 신뢰구축에 있어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로 진행된다.

미국의 예상제의: 남북한 신뢰구축

- CBM0: 4자회담 참여
- CBM1: 위기극복을 위한 고위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 CBM2: 공동위기관리센터 설립 등 통신망 구축, 조기경보 확보 조치
- CBM3: 군사훈련의 통보 및 대규모 기동훈련 제한
- CBM4: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 CBM5: 군사정보 및 군사활동의 상호 공개
- CBM6: 공세전력의 배치제한지대 설정
- CBM7: 대량살상무기 감축
- CBM8: 병력·무기 합의하 감축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CBM)⁷¹⁾ 과정은 상호간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 어려운 단계로 전개된다.

남북한 신뢰구축의 낮은 단계로서 CBM0는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해 논하는 단계다. CBM1은 남북 기본합의서 합의사항에서 이루기 제일 쉬운 부문이다. CBM2는 CBM1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기관리의 제도화를 통해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CBM3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군사훈련을 제한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한 신뢰구축의 중간 단계로서 CBM4는 비무장지대의 병력과 무기를 비무장지대 경계선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사항이지만 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CBM5는 군사훈련 시 상대측 참관단 초청, 부대의 편성·장비·국방예산 등 각종 군사정보의 상호공개와 교환, 특정규모이상 군부대의 이동 및 기동훈련 사전 통보를 포함한 군사활동 공개,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류실시 등의 운용적 군비통제의 실천이다. CBM6은 공격형 군사적 배치를 방어형으로 전환배치하려는 것이다.

남북한 신뢰구축의 높은 단계로서 CBM7은 미사일·생물·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감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CBM8은 병력·무기 등의 군비통제를 남북합의하에 실천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구조적·운영적 군비통제를 이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신뢰할 수 있는 구조적·운영적 군비통제를 위해 매 단계마다 검증(verification)⁷²⁾이 필요하다. 그것은 '유연하고 선택적인 검증'이

71) 남북한은 휴전이후 계속 군비통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남한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사력의 운영·배치에 관한 투명성에, 반면 북한은 대남핵명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군사훈련과 연습증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바람직하다. 남북한간에 군사적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군비축소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상응하여 검증의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⁷³⁾

미국의 예상제의 성취를 위한 수단

<대북 무상지원: f>

f₀: 지원 無

f₁: 식량 50만톤 + 의약품

f₂: 식량 100만톤 + 의약품

f₃: 식량 150만톤 + 의약품

미국의 대북 식량·의약품 지원은 인도주의적 이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식량지원에 있어서는 정치적 목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미정부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4자회담의 진전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⁷⁴⁾ 그러나 그동안 미국은 4자회담과 식량지원을 연계해 왔다.

72) 남북이 가지고 있는 자료·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객관적인 검증이 힘들다. 또한 합의한 군사조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대가 이를 부인하면 제재가 힘들다. 만약 어떤 제재를 가할 때 또다른 마찰과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어 검증을 둘러싼 문제는 남는다.

73)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152.

74)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Briefing, September 19, 1997.

미·북간 협상에 있어 미국은 ‘先요구수용, 後식량지원’을 주장해 온 반면 북한은 ‘先식량지원, 後요구수용’을 호소해 왔다. 순서를 놓고 협상을 벌인 4자회담에서의 경험을 참고 삼아 미·북간 협상 simulation은 식량량을 f_1 영역에서 50만톤, f_2 영역에서 100만톤, f_3 영역에서 150만톤으로 임의로 정한다. 더불어 각 영역에 미국의 의약품 지원이 추가된다.

< 달러제공: c >

- c_0 : 달러제공 無
- c_1 : 5천만 달러
- c_2 : 1억 달러
- c_3 : 2억 달러

달러제공은 미국이 북한에 현금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5천만 달러는 식량 17만톤 상당에 해당된다. 미국이 북한주민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북한에 무상제공할 때 이는 달러제공에 포함된다. 미국이 달러화할 수 있는 물품을 무상으로 북한에 공급할 때도 달러 제공에 해당된다. 평양측이 미국에 금창리 핵시설을 공개하는 대가로 3억 달러를 협상액으로 제시한 전례와 같이 남북간 신뢰구축 진전의 대가로 미국에 달러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미·북간 협상 simulation은 c_0 영역에 5천만 달러, c_1 영역에 1억달러, c_2 영역에 2억 달러를 임의로 책정하기로 한다.

<경제제재완화조치: s>

- s0: 경제제재완화 미조치
- s1: 북한 농업개발지원,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해제
- s2: 미기업 해외법인의 대북투자 및 무역, 미은행을 통한 송금 등 초보적 수준의 경제제재완화조치
- s3: 미기업의 대북투자 허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원
- s4: 미수출입은행의 대북한 여신제공 허용
- s5: 수출입 제한조치 포괄적 완화
- s6: 수출입 제한조치 전면철폐
- s7: 최혜국대우 부여 및 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 s8: 일부 군수통제품목의 대북 수출입 완화

미국은 경제제재를 외교정책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⁷⁵⁾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해제가 필수적이다. 미·북 기본합의서 제3조 제1항, “이 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측은 통신 서비스 및 금융거래 제한을 포함하는 교역 및 투자 장벽을 완화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클린턴 정부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는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일정한 조건하에서 금융거래 허용 등 극히 부분적·제한적이다. “미·북간 합의는 상호주의를 근간으

75) Jesse Helms, “What Sanctions Epidemic?: U.S. Business’ Curious Crusade,” *Foreign Affairs*, vol. 78, no. 1, pp. 2~8. See also Dianne E. Rennack and Robert D. Shuey, “Economic Sanctions to Achieve U.S. Foreign Policy Goals: Discussion and Guide to Current Law,” *CRS Report for Congress*, (January 22, 1998).

로 하고 있고, 매단계에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⁷⁶⁾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미정부는 북한의 상응조치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 대북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의회를 의식한 방침이다.

따라서 미정부는 북한이 폭력적 행위 및 테러행위 중단, 4차회담에서의 노력, 남북간 신뢰구축, 핵동결 이행,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면 상호주의에 입각해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제적인 영역 → 북한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영역 → 군사적 영역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에서 거론된 상기 목표와 수단들을 「피라 및 협상 모델」에 적용해 미·북간 협상 simulation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 진행은 다음과 같다.

1. CBM은 낮은 단계 → 중간 단계 → 높은 단계로 진행된다.
 - 1) CBM0, CBM1, CBM2, CBM3는 낮은 단계다.
 - 2) CBM4, CBM5, CBM6은 중간 단계다.
 - 3) CBM7, CBM8은 높은 단계다.
2. CBM 각 단계별 수단취득(직선, 대각선)은 해당단계, 해당단계 앞, 해당단계 뒤의 범위까지만 허용된다.

76) *Washington Post*, March 27, 1997. 클린턴 정부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상호주의와 관련 공화당측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은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협상의 수단으로 제시된, 식량·의약품 지원, 달러제공, 경제제재 완화조치 등은 한 부분만 얻는 경우,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을 동시에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부분을 이중으로 동시에 취득할 수 없다.
4. 수단을 얻는 범위는 점선으로 연결된다. 이동은 직선, 대각선으로 가능하며, 양 쪽으로 영역이 걸쳐 있는 경우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1, 2, 3, 4의 진행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단위는 다음과 같다.

CBM0: $f_0, f_1, c_0, c_1, s_0, s_1, f_0c_0, f_0s_0, f_0c_1, f_0s_1, f_1c_0, f_1c_1, f_1s_0, f_1s_1, c_0s_0, c_0s_1, c_1s_0, c_1s_1, f_0c_0s_0, f_0c_0s_1, f_0c_1s_0, f_0c_1s_1, f_1c_0s_0, f_1c_1s_0, f_1c_1s_1$ (25)

{실제 가능영역: $f_1, c_1, s_1, f_1c_1, f_1s_1, c_1s_1, f_1c_1s_1$ (7)}

CBM1: $f_0, f_1, c_0, c_1, s_0, s_1, f_2, c_2, s_2, f_0c_0, f_0s_0, f_0c_1, f_0s_1, f_1c_0, f_1c_1, f_1s_0, f_1s_1, f_2c_1, f_2c_2, f_2s_1, f_2s_2, c_0s_0, c_0s_1, c_1s_0, c_1s_1, c_1s_2, c_2s_1, c_2s_2, f_0c_0s_0, f_0c_0s_1, f_0c_1s_0, f_0c_1s_1, f_1c_0s_0, f_1c_0s_1, f_1c_1s_0, f_1c_1s_1, f_1c_1s_2, f_2c_1s_1, f_2c_1s_2, f_2c_2s_1, f_2c_2s_2$ (41)

{실제 가능영역: $f_1, c_1, s_1, f_2, c_2, s_2, f_1c_1, f_1s_1, f_2c_1, f_2c_2, f_2s_1, f_2s_2, c_1s_1, c_1s_2, c_2s_1, c_2s_2, f_1c_1s_1, f_1c_1s_2, f_2c_1s_1, f_2c_1s_2, f_2c_2s_1, f_2c_2s_2$ (22)}

$$\begin{aligned} \text{CBM2: } & f_1, c_1, s_1, f_2, c_2, s_2, f_3, c_3, s_3, f_1c_1, f_1s_1, f_1c_2, f_1s_2, f_2c_1, f_2c_2, \\ & f_2s_1, f_2s_2, f_3c_2, f_3s_2, f_3c_3, f_3s_3, c_1s_1, c_1s_2, c_2s_1, c_2s_2, c_2s_3, c_3s_2, \\ & c_3s_3, f_1c_1s_1, f_1c_1s_2, f_1c_2s_1, f_1c_2s_2, f_2c_1s_1, f_2c_1s_2, f_2c_2s_1, f_2c_2s_2, \\ & f_2c_2s_3, f_3c_2s_2, f_3c_2s_3, f_3c_3s_2, f_3c_3s_3 \quad (41) \end{aligned}$$

$$\begin{aligned} \text{CBM3: } & f_2, f_3, c_2, c_3, s_2, s_3, f_2c_2, f_2s_2, f_3c_2, f_3s_2, f_3c_3, f_3s_3, c_2s_2, c_2s_3, \\ & c_3s_2, c_3s_3, f_2c_2s_2, f_2c_3s_2, f_2c_2s_3, f_2c_3s_3, f_3c_2s_2, f_3c_3s_2, f_3c_3s_3 \\ & (23) \end{aligned}$$

$$\text{CBM4: } s_4, s_5, f_1c_1, f_2c_2, f_1c_1s_4, f_1c_1s_5, f_2c_2s_4, f_2c_2s_5 \quad (8)$$

$$\begin{aligned} \text{CBM5: } & s_4, s_5, s_6, f_1c_1, f_2c_2, f_3c_3, f_1c_1s_4, f_1c_1s_5, f_2c_2s_4, f_2c_2s_5, f_2c_2s_6, \\ & f_3c_3s_5, f_3c_3s_6 \quad (13) \end{aligned}$$

$$\text{CBM6: } s_5, s_6, f_2c_2, f_3c_3, f_2c_2s_5, f_2c_2s_6, f_3c_3s_5, f_3c_3s_6 \quad (8)$$

$$\text{CBM7: } f_3c_3s_8, f_2c_2s_7w_1 \quad (2)$$

$$\text{CBM8: } f_3c_3s_8, f_2c_2s_7w_1 \quad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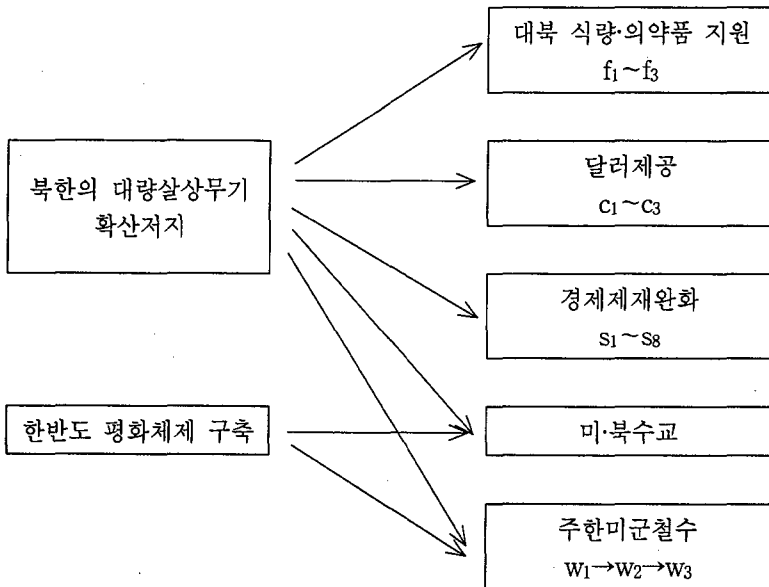
f, c영역과 달리 s영역은 점진적·단계적 조치가 가능하다. 미·북 협상 simulation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진행됨을 근거로 할 때, 단계적 남북간 신뢰구축과 함께 단계적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예상할 수 있다.

2. 미·북간 협상 simulation(comprehensive package)

단계적 방식에 의한 미·북간 협상 simulation은 한국의 개입이 필요되는 반면 일괄타결에 의한 simulation은 미·북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은 미·북간 일괄타결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지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미·북간 수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역시 미·북간 일괄타결 방식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미·북간 협상 simulation(comprehensive package, 이하 CP)은 「미·북간 일괄타결 방안」(<도표 4>)에서 나타난다.

<도표 4> 미·북간 일괄타결 방안



미·북간 협상 대상과 수단

MDW1: 북한의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 중단

MDW2: 북한의 미사일·생물·화학무기 생산 감축·중단

KPS: 남·북·미·중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USMW: 한·미의 미사일 무기 감축

UNNR: 미·북 수교

미국은 북한 핵의 동결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⁷⁷⁾ 미국은 냉전종식으로 핵전쟁의 위험은 감소했지만 북한이 핵 재개발 의지와 함께 미사일·생물·화학무기 등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 이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주력하고자 한다.

핵확산방지조약과 달리 미사일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국제적 조약도 없으므로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핵무기개발 못지않게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은 Frog, Scud-B, Scud-C, Scud-D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대포동 1호 실험발사에 이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대중동적성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중단시키고자 한다. 미국은 북한이 이란·시리아·이라크·자이르 등에 약 4백기의 개량형 Scud B/C 미사일 및 개발기술을 수출⁷⁸⁾한 사

77)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November 1998), pp. 47~51; Clinton, *The 1997 State of the Union Address*, p. 46; William S. Cohen,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April 1997), p. 3;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May 20, 1997), p. 10.

실에 경악하고 있다. 또한 미국방부는 파키스탄이 자체 개발한 가우리 미사일(사정거리 1,500km)이 노동2호 미사일의 부품과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에도 놀라고 있다.⁷⁹⁾

미국은 북한의 생물·화학무기 생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없다. 북한은 신경성·수포성·혈액성 유독가스 1천여 톤에 달하는 화학무기를 그리고 세균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콜레라·페스트·탄저균·유행성 출혈열의 病原 등 전염성 작용제까지 배양·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에 비해 생물·화학무기가 낮은 기술과 적은 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으며 엄청난 살상효과가 있어 이들 무기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를 위해 대규모 식량지원, 달러제공, 경제제재완화조치, 미·북수교 등을 일괄타결 협상수단으로 삼고 있다. 미·북수교가 성사되려면 양측간 적성국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는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룩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해 북한과 일괄타결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전개될 수 있다.

78) 북한이 그동안 중동지역에 판매한 미사일은 이란 2백2기, 시리아 1백50기, 이라크 1백기, 자이르 18기이다. 「국회통일외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1996.9.25); 「한국일보」, 1996.4.22; 「중앙일보」, 1999.3.28; *Defense News*, September 1~7, 1997; *Washington Times*, October 3 참조.

79) Joseph S. Bermudez Jr., "A Silent Partner," *Janes Defense Weekly*, vol. 9, no. 20 (May 20, 1998), pp. 16~17; *New York Times*, April 24, 1998; 「毎日新聞」, 1998.4.14; 「時事解説」, 1998.4.24; 「讀賣新聞」, 1998.5.3.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일괄타결

$$\langle \text{공식1} \rangle \quad \frac{f_x + c_y + \sum_{k=1}^m s_k}{\text{MDW1}}$$

$$0 \leq x, y \leq 3$$

$$m \leq 8$$

$$\langle \text{공식2} \rangle \quad \frac{f_x + c_y + \sum_{k=1}^m s_k + \text{USMW}}{\text{MDW1} + \text{MDW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일괄타결

$$\langle \text{공식3} \rangle \quad \frac{\text{UNNR} + \sum_{k=1}^n w_{k-1}}{\text{KPS}}$$

w_1 : 주한미군 1단계 철수

w_2 : 주한미군 2단계 철수

w_3 : 주한미군 3단계 철수

$$1 \leq n \leq 4$$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일괄타결

<공식4>
$$\frac{f_x + c_y + \sum_{k=1}^m s_k + \sum_{k=1}^n w_{k-1} + \text{USMW} + \text{UNNR}}{\text{MDW1} + \text{MDW2} + \text{KPS}}$$

3. 미·북간 협상에 있어 성사 전망

미·북간 협상 simulation은 남북한 긴장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번 절은 그 구성요인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투입해 미·북간 협상 성사를 전망하고자 한다.

남북한 긴장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

< 미국 요인 >

- US1: 북한의 핵동결 이행 여부
- US2: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미의회의 견제 여부
- US3: 대북 강경노선의 미공화당 집권 여부
- US4: 대북지원 정책의 지속과 변화
- US5: 북한의 정전체제 파기 행위
- US6: 북한의 침략위협 및 대남도발
- US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여부
- US8: 북한과의 관계개선 정도

US9: 북한과 관계정상화

US10: 대북 정책에 있어 중국과의 협조 여부

US11: 한·미 공조체제의 정도

< 북한 요인 >

NK1: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의 지속 여부

NK2: 신포 경수로건설사업의 지속 여부

NK3: 식량난 해소 정도

NK4: 경제난 해소 정도

NK5: 사회안정성 정도

NK6: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여부

NK7: 김정일 정권의 대남 무력정책 변화 여부

NK8: 개혁·개방 추진 정도

NK9: 미·북관계 개선 정도

NK10: 남북관계 개선 정도

NK11: 미국과의 협상 수용 여부

NK12: 중국의 설득 수용 여부

< 한국 요인 >

SK1: 햇볕정책의 지속 여부

SK2: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 정도

SK3: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

SK4: 한·미 공조체제의 정도

SK5: 남북관계 개선 여부

SK6: 미·북관계 개선 여부

SK7: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의 지속과 변화

< 중국 요인 >

CH1: 대북지원 정책의 지속 여부

CH2: 미·북관계 개선 여부

CH3: 한·중관계 개선 여부

CH4: 미국의 대중 협조 여부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때 미·북간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 긍정적 요인 >

US1: 북한의 핵동결 이행

US2: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미의회의 견제 부재

US4: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의 지속 (SK7)

US7: 북한의 미사일 수출중단 및 미사일·생물·화학무기 생산 감축

US8: 미·북관계 개선 (NK9, SK6, CH2)

US9: 미·북관계 정상화

US10: 대북 정책에 있어 미·중 협조

NK1: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의 지속

NK2: 신포 경수로건설사업의 지속

NK3: 북한의 식량난 해소

NK4: 북한의 경제난 해소

- NK7: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변화
- NK8: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 NK11: 미·북협상 진전
- NK12: 중국의 대북설득 수용
- SK1: 한국의 햇볕정책 지속
- SK3: 대북 지원에 대한 한국민의 지지
- SK5: 남북관계 개선
- CH1: 중국의 대북지원 정책의 변화
- CH4: 미국의 대중 협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때 미·북간 협상은 어려워 질 것이다.

< 부정적 요인 >

- US1: 북한의 핵동결 지연 및 핵의혹
- US2: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미의회의 견제
- US3: 대북 강경노선의 미공화당 집권
- US4: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의 변화 (SK7)
- US5: 북한의 정전체제 파기 행위
- US6: 북한의 침략위협 및 대남도발
- US7: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실험발사,
미사일·생물·화학무기 수출 및 확산
- US8: 미·북관계 경색 (SK6, CH2)
- NK1: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 중단
- NK2: 신포 경수로건설사업 지원 중단

- NK3: 북한의 식량난 지속
- NK4: 북한의 경제난 지속
- NK5: 사회불안정성 확대
- NK6: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
- NK7: 김정일 정권의 대남무력정책 지속
- NK9: 미·북관계 악화 (SK6)
- NK10: 남북관계 악화 (SK5)
- NK11: 미국과의 협상 거부
- NK12: 중국의 설득 거부
- SK1: 한국의 햇볕정책 중단
- SK2: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에 대한 한국의 강력 대응
- SK3: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
- CH1: 중국의 대북지원 정책의 변화
- CH3: 한·중관계 개선
- CH5: 미국의 대중 협조 미진

북한의 핵동결이 파기(US1)될 시 부정적 요인이 전반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2001년까지 보관되어 있는 폐연료봉을 제3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바로 그 때가 북한의 핵동결 완료시점으로 4자회담의 성사 여부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미·북간 협상과 한반도 긴장완화는 2001년까지 상기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다가 그 시점을 기점으로 급전전이나 미전전이나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01년을 전후로 나누어 남북한 긴장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의 작동과 If ~ Then 공식을 적용해 미국의 선택을 가정하고자 한다.

1999~2000년

남북한 긴장완화 긍정적 요인이 부정적 요인보다 우세

가정 1: 북한이 어떠한 신뢰구축을 진전시키지 않더라도 4자회담의 틀을 깨지 않는다면 $f_1, c_1, s_1, f_1c_1, f_1s_1, c_1s_1, f_1c_1s_1$ 가운데 어떤 영역을 얻을 수 있다.

4자회담에서 당장 의제를 관철시키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시간을 두면서 의제논의에만 참여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4자회담 참여만으로는 북한에 대해 달러제공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CBM0 단계에서 기대되는 것은 f_1, s_1, f_1s_1 등이다.

이 중 f_1s_1 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대남 침략위협 및 테러행위를 자제하고 4자회담에 성의를 보인다면 미국은 식량·의약품 지원과 함께 매우 미미한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 식량·의약품 지원은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4자회담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다. 미국이 국제기구 및 민간·종교단체 등을 통해 1997년, 1998년 100만톤 정도의 식량을 인도주의적 고려 및 연착륙과 4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제공하였지만 주로 인도주의적 이유를 내세워 지원하였다.

예상되는 경제제재완화조치로는 미국의 북한 농업개발지원과 미국 내 1천4백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자산 동결해제이다. 농업개발 지원은 비료지원을 포함 감자 재배를 돕는 민간단체의 농업개발프로젝트 지원이 될 것이다. 북한자산 동결해제조치는 미국인의 대북한

채권조사 → 대북채권 및 동결 북한자산 규모 파악 → 북한측과의 청산협상 진행 → 자산동결 문제의 해결 수순을 밝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⁸⁰⁾

가정 2: 북한이 남북한 신뢰구축 1단계를 진전시킨다면 $f_1, c_1, s_1, f_2, c_2, s_2, f_1c_1, f_1s_1, f_2c_1, f_2c_2, f_2s_1, f_2s_2, c_1s_1, c_1s_2, c_2s_1, c_2s_2, f_1c_1s_1, f_1c_1s_2, f_2c_1s_1, f_2c_1s_2, f_2c_2s_1, f_2c_2s_2$ 가운데 어떤 영역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위기극복을 위한 고위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와 같은 신뢰구축 1단계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 제한적 경제제재완화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가정2>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역은 $f_1, s_1, f_2, s_2, f_1s_1, f_2s_1, f_2s_2$, 등이다. c 영역 모두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CBMI 수준에서 달러제공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s_1 영역이 이전 단계에서 진행됨을 전제로 할 때 보다 기대되는 영역은 f_1, f_2, s_2, f_2s_2 등이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 제3조 1항에 기초한 초보적 수준의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조치로는 미국기업 해외법인의 대북투자·무역, 미은행을 통한 송금, 미여행자의 북한내 신용카드 사용, 화물선 및 전세기 북한입국 등이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식량수입을 위해 바터나 필요한 외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해외법인 기업의 북한농업 및 광물개발 투자 등이 우선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또한 옥수수, 식료품,

80) 「북한뉴스레터」, (1997.10), p. 4. 대부분 은행예금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부동산현금 등의 자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품, 디젤유, 유황, 니켈합금박 등 미국 상품들의 대북 수출과 마그네사이트 등 북한광물의 대미 수출이 바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정 3: 북한이 남북한 신뢰구축 2단계를 진전시킨다면 $f_1, c_1, s_1, f_2, c_2, s_2, f_3, c_3, s_3, f_1c_1, f_1s_1, f_1c_2, f_1s_2, f_2c_1, f_2c_2, f_2s_1, f_2s_2, f_3c_2, f_3s_2, f_3c_3, f_3s_3, c_1s_1, c_1s_2, c_2s_1, c_2s_2, c_2s_3, c_3s_2, c_3s_3, f_1c_1s_1, f_1c_1s_2, f_1c_2s_1, f_1c_2s_2, f_2c_1s_1, f_2c_1s_2, f_2c_2s_1, f_2c_2s_2, f_2c_2s_3, f_3c_2s_2, f_3c_2s_3, f_3c_3s_2, f_3c_3s_3$ 가운데 어떤 영역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공동위기관리센터 설립 등 통신망 구축, 조기경보 확보 조치 등을 진척시킨다면 미국은 대북지원 및 경제제재완화조치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위기관리 조치를 위해 달러제공을 협상수단으로 내놓지 않을 것이다. 위기관리조치는 미·북이 모두 필요로 하는 예방방어의 기본적 수단인데, 이의 성사를 위해 미국이 달러를 제공하리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반영한 기대 영역은 $f_1, s_1, f_2, s_2, f_3, s_3, f_1s_1, f_1s_2, f_2s_1, f_2s_2, f_3s_2, f_3s_3$ 등이다. 이전 단계에서 s_2 가 진행됨을 전제로 할 때 얻을 수 있는 영역은 $f_1, f_2, f_3, s_3, f_3s_3$ 등이다. 이 중 f_1, f_2 제공만 가지고는 대가가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은 f_3, s_3, f_3s_3 등이다.

경제제재완화조치로서는 미기업의 대북 투자허용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관 가입지원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미기업의 대북 투자허용은 해외법인의 대북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

(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은행에 25% 상당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시아 개발은행에는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이들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으려 할 때 미국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가정 4: 북한이 남북한 신뢰구축 3단계를 진전시킨다면 $f_2, f_3, c_2, c_3, s_2, s_3, f_2c_2, f_2s_2, f_3c_2, f_3s_2, f_3c_3, f_3s_3, c_2s_2, c_2s_3, c_3s_2, c_3s_3, f_2c_2s_2, f_2c_3s_2, f_2c_2s_3, f_2c_3s_3, f_3c_2s_2, f_3c_3s_2, f_3c_3s_3$ 가운데 어떤 영역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군사훈련의 통보 및 대규모 기동훈련 제한 등을 실현시킨다면 미국은 틱스프리트 훈련을 연기 또는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는 식량·의약품지원이 고려된다. 이 단계에서 경제제재완화조치 및 달러제공 등이 대가로부터 배제된다. 상호 훈련제한이 대가의 명분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한 예상영역은 f_2, f_3 등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따라 f 영역이 결정될 것이다.

가정 5: 북한이 대중동적성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f_3, c_3, s_1 \sim s_3$ 등을 취할 수 있다.

미·북간 협상에서 북한은 대중동국가에 대한 미사일무기 수출 중단 대가로 10억 달러를 미국에 요구한 적이 있다.⁸¹⁾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가격을 산정한 뒤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보상을 마련할 것이

81) *Washington Post*, March 14, 1999;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 1999.

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f영역의 최대치 150만톤(4억4천만 달러)의 식량지원을 고려할 것이다. 이 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수출 감축의 수혜자가 될 한국·일본과 함께 식량지원에 나서려 할 것이다.

또한 한·미·일은 또다른 수혜국인 이스라엘과 함께 c₀영역에 해당되는 2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할 것이다. 나머지 보상을 위해 미국은 북한 농업개발지원,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해제, 미해외기업의 대북 투자 및 무역, 미은행을 통한 송금 그리고 미기업의 대북투자 허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원 등 경제적 영역의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가정 6: 북한이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중단 및 생산감축, 생물·화학무기 생산중단,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선다면 미국은 f₃, c₃, s₄~s₈, 미·북수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중단에 이어 생산감축에 나서고 생물·화학무기 생산을 중단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미수출입은행의 대북한 여신제공 허용, 수출입 제한조치의 포괄적 완화에 이어 전면철폐, 최혜국대우 부여 및 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등 경제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이다. 이어 미국은 일부 군수통제품목의 대북 수출입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전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및 '화학무기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가입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4자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응한다면 미국은 미·북수교에 동의할 것이다.

2001~2003년

남북한 긴장완화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절대 우세

남북한의 신뢰구축은 2001년을 기점으로 진퇴기로에 놓일 것이다. 누가 차기 미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미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강성이나 유희이냐에 따라 북한의 대미정책도 달라질 것이다. 만약 미국정책이 강성으로 흐르면 평양 정책결정자들은 폐연료봉 반출을 연기하면서 체체수호를 위한 핵카드를 미국을 대상으로 재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과거 핵물질의 행방을 포함, 핵개발 의혹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IAEA의 주도하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핵폐기물 매립장 2곳에 대한 사찰을 계속해서 거부할 것이다. 이로 인해 미·북은 갈등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며 대북 중유제공 중지를 포함하여 경수로 공급 지원도 난관에 처해질 것이다.⁸²⁾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취할 경우 북한은 핵동결 조치를 스스로 해제하고 핵폭탄을 제조하려 할 것이다. 이에 미국은 대북제재 등 강경공세를 취할 것이고 북한은 전쟁불사 자세로 맞대응하려 할 것이다. 이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2기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폐연료봉을 북한에 계속 보관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연료봉이 전문제를 들고 미정부와 협상을 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NPT조약의무 및 남북한 비핵화선언을 무시한 전력을 상기할 때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⁸³⁾

82) 이현경,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52.

83) 이현경,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64.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양지도부는 미국의 상황을 관망하기 위해 남북한 신뢰구축을 진전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네바 기본합의는 ‘구속력 없는 정치협정’(non-binding political agreement)에 불과하고 「제네바 기본합의문」은 클린턴 정부와 북한당국이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새 정부와 다시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고집할 수 있다.⁸⁴⁾ 그러면서 북한은 가끔씩 한반도 긴장을 격하시키는 행동을 하면서 핵 재개발 움직임을 보이려 할 것이다. 때문에 이 기간 남북한 신뢰구축은 진척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구축마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긴장완화에 매우 부정적 요인이 작동하면 - 예를 들어 한국이 용납하기 어려운 북한의 대남도발, 정전협정 파기 등 - 남북간 신뢰구축은 중단될 것이다. 이 때 그동안 이룩해 놓은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거나 후퇴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명제는 위에서 언급된 가정을 뒷받침한다.

명제 1: 남북한 신뢰구축이 진행된다면 미국은 대북 식량·의약품지원, 달러제공, 경제제재완화조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명제 2: 북한이 핵동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완화 조치는 중단되고 그 이전 단계에 취해진 조치마저 재동이 걸릴 것이다.

명제 3: 남북한 신뢰구축이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핵동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완화조치는 중단되고 그 이전

84) 이현경,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pp. 61~62.

단계에 취해진 조치마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명제 4: 차기 미대통령에 강경 공화인사가 당선되면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

명제 5: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변경되면 평양지도부는 핵무기를 체제수호 및 군사적 수단으로 삼기 위해 핵동결 이행을 연기하면서 핵 재개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북한은 차기 미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하면서 핵동결을 지연시키고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보다는 설득, 협상, 위협 등의 방법을 먼저 모색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려 할 것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면서 4자회담을 회색시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북·미간 고위급 및 실무적 차원의 대화채널을 가동할 수 있어 굳이 난국에 4자회담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북한이 북·미간 전례를 경험삼아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 첫째, 4자회담의 틀 밖에서도 미국과 핵문제, 실종미군 유해송환, 미사일수출문제 등 북·미간 현안에 대해 직접 협상할 수 있다. 둘째, 한·미공조체제를 통해 대북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유엔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한국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셋째, 미국과 미사일 협상, 생물·화학무기 협상의 여지가 있어 어느 정도의 양보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 및 경제제재완화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004년~
북한의 핵동결 완료후 남북한 긴장완화 긍정적 요인이 우세

결국 북한이 핵동결을 이행하리라 본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핵동결을 완료하지 않으면 미·북 합의는 무산될 것이며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닌 미국의 대북 지원은 완전 중단될 것이다. 대북 경제제재 역시 강화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이 핵동결을 완료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기류속에 남북한 신뢰구축을 진척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다.

가정 7: 북한이 남북한 신뢰구축 4단계를 진전시킨다면 s_4 , s_5 , f_1c_1 , f_2c_2 , $f_1c_1s_4$, $f_1c_1s_5$, $f_2c_2s_4$, $f_2c_2s_5$ 가운데 어떤 영역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에 나선다면 미국은 이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기대되는 영역은 $f_2c_2s_4$ 이다. 달러제공이 추가되는데 이는 미국이 북한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달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가 경제제재완화조치로 미국은 수출입은행의 대북한 여신제공을 허용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테러지원국가이며 비시장경제국가란 이유를 들어 북한의 미국은행 금융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선 북한의 테러행위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몇 년

간 부재해야 하며 북한이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가정 8: 북한이 남북한 신뢰구축 5단계를 진전시킨다면 $s_4, s_5, s_6, f_{1C1}, f_{2C2}, f_{3C3}, f_{1C1S4}, f_{1C1S5}, f_{2C2S4}, f_{2C2S5}, f_{2C2S6}, f_{3C3S5}, f_{3C3S6}$ 가운데 어떤 영역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군사훈련시 상대측 참관단 초청, 부대의 편성·장비·국방예산 등 각종 군사정보의 상호공개와 교환, 특정규모이상 군부대의 이동 및 기동훈련 사전 통보를 포함한 군사활동 공개,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류실시 등에 응한다면 북한이 s_5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계에서 달러제공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군사정보 및 군사활동의 공개는 상호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달러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얻어진 영역에 식량·의약품 지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s_5 를 기대영역으로 잡고 있다. 경제제재완화조치는 이전 단계의 상향 단계를 기준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완화조치는 수출입 제한조치에 대한 포괄적 완화가 될 것이다. 북한은 쿠바와 함께 전면적 수출봉쇄 대상국가그룹인 Z국가군에 속해 있으며, 수출규제법의 포괄적 금수조치를 받고 있다. 미국이 이 조치를 완화시키면 미국과 북한의 상품, 기술, 서비스는 수출입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그 폭과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동시에 북한과 일본·서방국가기업들과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이다.

가정 9: 북한이 남북한 신뢰구축 6단계를 진전시킨다면 $f_{2C2}, f_{3C3}, s_5, s_6, f_{2C2S5}, f_{2C2S6}, f_{3C3S5}, f_{3C3S6}$ 가운데 어떤 영역을 얻을 수 있다.

남북이 공세전력의 배치제한지대를 설정한다면 예상되는 기대 영역은 s_6 이다. 이 단계에서도 달려제공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피라밋 협상 모델」 6단계에서 식량·의약품 지원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s_6 만 기대영역으로 예상한다. 경제제재완화조치는 이전 단계의 상향 단계를 기준한 것이다. 그것은 수출입 제한조치 전면철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군사적 이용 목적이 아닌 미·북간 교역·투자는 전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1단계 철수가 가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4자회담의 틀속에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또는 후방으로의 이동배치를 북한군의 군사력감축과 후방철수를 연계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 북한이 공세전력의 배치제한지대 설정에 응한다면 주한미군의 1단계 철수가 가능하리라 본다. 주한미군의 1단계 철수는 미국이 1990년 구상한 ‘동아시아 전략구상’(The East Asian Strategic Initiative: EASI)에 포함된 주한미군 3단계 감축 계획안⁸⁵⁾을 기초로

85) 한국정부·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닉슨·카터 정부는 주한미군 일부를 감축한 바 있다. 특히 카터 정부는 완전 철군계획을 추진하였고, 결국 이 정책은 미의회 및 군부로부터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지적받아 철군이 중단되었다.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부시 정부는 EASI 보고서를 통해 3단계 주한미군 철군안을 제시하였다. 1992년 북한의 핵위협이 대두되자 제2단계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중지된 바 있다. 클린턴 정부는 「동아시아 전략보고」(East Asia Strategy Report: EASR, 1995.2)를 통해 3단계 감축안을 완전히 폐기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단계적 주한미군의 감축을 고려하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대두되면 이를 백지화하는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정부는 이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설명은 Jimmy Carter, *Keeping Faith, Memories of a President* (New York: Bantam Book, 1982), pp. 186~211; *Hearings on Review of the Policy Decision to Withdraw United States Ground Forces from Korea before the Investigations Subcommittee,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 95th Cong., 1977~78, HASC No. 95~7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 7, 78;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pril 1990); U.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Report*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2);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주한미군 43,000명 중 총 7,000명(지상군 5,000명, 공군 2,000명)의 감축이 될 것이다.

가정 10: 북한이 남북한 신뢰구축 7단계를 진전시킨다면 $f_2C_2S_7$, $f_3C_3S_8$ 등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 무기 및 생물·화학무기 감축에 나선다면 북한은 $f_2C_2S_7$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 미국은 북한의 달러를 제공하고, 식량 및 의약품의 최대치 추가 지원을 통해 북한을 충족시키고자 할 것이다. 예상되는 경제제재완화조치로는 최혜국대우(MFN) 부여 및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어느 정도의 국제경제체제에의 참여가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수출 감축에 대한 대가로 전자·우주항공 생산제조와 관련된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단계에서 주한미군 2단계 철수가 예상된다. EASI에 기초, 남북한의 관계진전과 전력수준을 검토하면서 주한미군 2단계 철수가 진행될 것이다.

가정 11: 북한이 남북한 신뢰구축 8단계를 진전시킨다면 $f_2C_2S_7$, $f_3C_3S_8$ 등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 군사력에 있어 병력과 무기의 양적인 면은 북한이 우세한 반면 질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우세하다. 남북합의하에 병력·무기 등

의 군비통제를 실현한다면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북한에 치를 것이다. 경제제재완화조치로 s_8 를 예상될 때 기대 영역은 $f_3C_3S_8$ 이 될 것이다.

경제제재완화조치로는 일부 군수통제품목 및 방위산업물자, 전자, 우주항공 등에 대한 용역판매 및 수출입 등을 허용할 것이다. 이 때 북한이 국제테러지원국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제3단계 주한미군 철수를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EASI에 기초해 5년에서 7년사이 해공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상군 철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피라밋 협상 모델」에 따른 「미·북간 협상 simulation, SBS」이 진행된다면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경제회생은 물론 남북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면서 종국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남북한 긴장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한 것이다.

「미·북간 협상 simulation, CP」에 따르면 북한의 핵동결 완료후 남북한 긴장완화 긍정적 요인이 우세할 때 일괄타결에 의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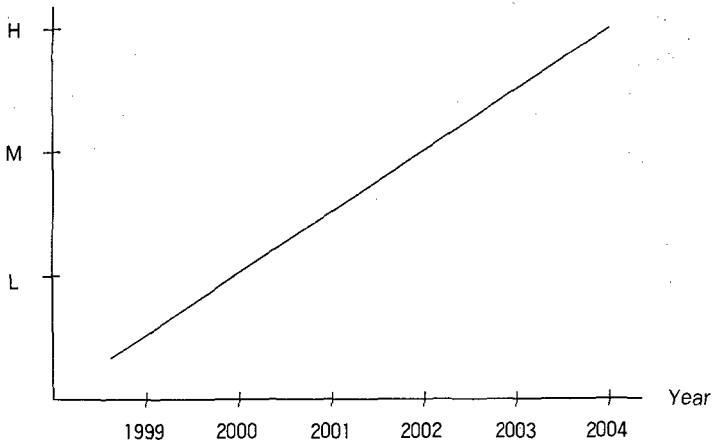
가정 12: 북한이 미사일의 발사실험·배치·수출 중단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중단, 그리고 생물·화학무기 생산을 중단한다면 이에 준한 미국의 한반도내 미사일무기 감축과 $f_3, C_3, S_4 \sim S_8$ 등의 추가 경제제재완화조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응한다면 미국은 미·북수교 및 주한미군의 1, 2 단계 철수에 나설 것이다.

<가정 12>는 북한의 핵동결 완료후 남북한 긴장완화 긍정적 요인이 작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6>의 결과와 함께 주한미군 1, 2단계 철수를 예상할 수 있다. 경제제재완화는 북한의 핵동결 완료이전 남북한 긴장완화 긍정적 요인이 부정적 요인보다 우세할 때 얻을 수 있는 조치이후 취할 수 있는 미국 수출입은행의 대북한 여신제공 허용, 수출입 제한조치 포괄적 완화에 이은 전면철폐, 최혜국대우 부여 및 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일부 군수통제품목 및 방위산업물자, 전자, 우주항공 등에 대한 용역판매 및 수출입 허용 등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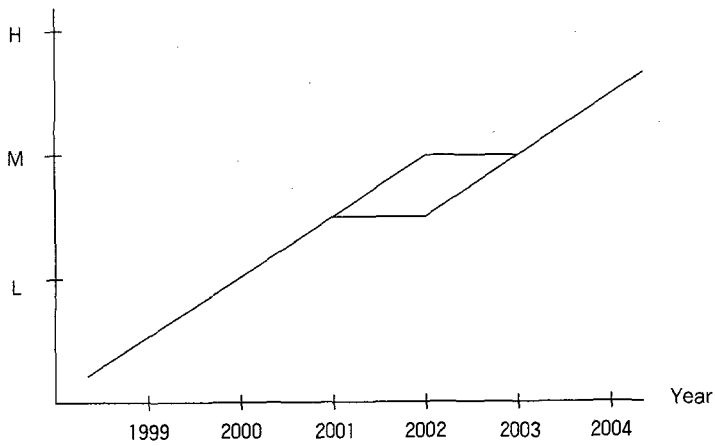
남북한 신뢰구축은 <도표 5-1>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도표 5-2>와 같이 2001년, 2002년 북한 핵동결문제가 지연되다가 2002년,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남북한 긴장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전반적으로 우세할 때 <도표 5-3>과 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4자회담에서 의제만 논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수단이 제공되다가 또는 중단되다가 하는 반복 상태가 될 것이다. 또다른 시나리오는 <도표 5-4>와 같이 1999~2001년(또는 1999~2002년)까지 잘 진행되고, 2001~2002년(또는 2002~2003년) 정지상태에 머물면서 2002년(또는 2003년)을 기점으로 곤두박질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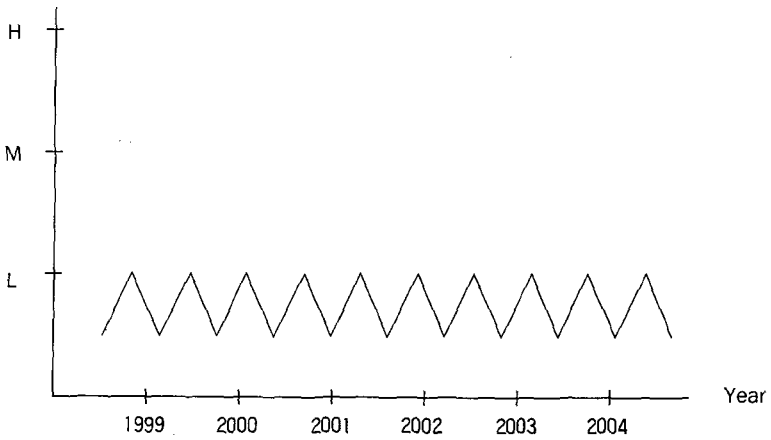
〈도표 5-1〉 「상승」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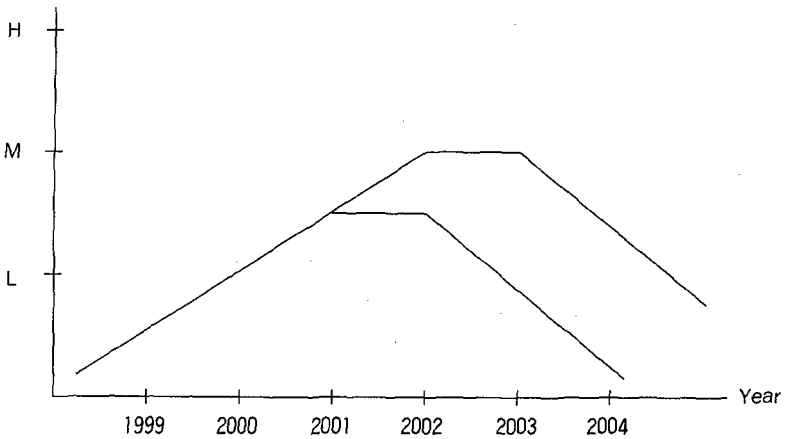
〈도표 5-2〉 「상승-담보-상승」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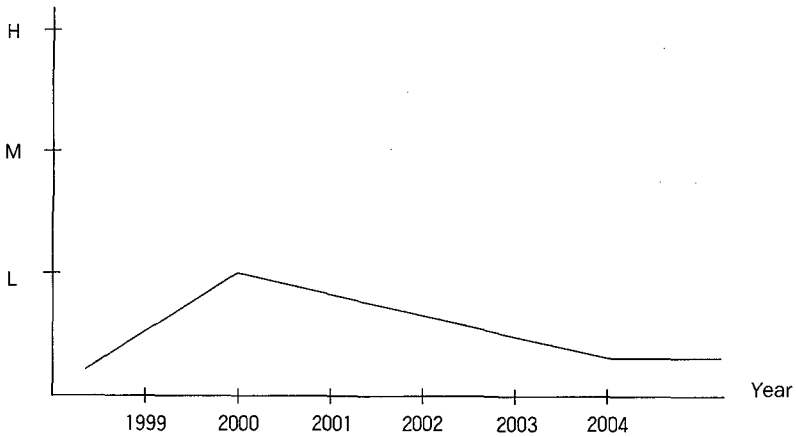
〈도표 5-3〉 「상승-하강-상승-하강」형



〈도표 5-4〉 「상승-담보-하강」형



〈도표 5-5〉 「상승-하강-답보」형



남북한 긴장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놓고 미·북간 협상 simulation을 통해 내릴 수 있는 전망은 다음과 같다.

< SBS simulation에 의한 전망 >

전망 1: 1999~2000년 CBMI, 2, 3까지 상승곡선을 타다가 2001~2003년간 하강, CBMI가 후퇴하면서 2004년부터 CBMI, 2단계까지만 유지될 것이다(<도표 5-5> 참조).

< CP simulation에 의한 전망 >

전망 2: 1999~2000년 북한이 대중동적성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을 중단하고 미국이 대규모 식량지원, 달러제공, 경제적 영역의 경제제재완화조치 등을 취할 것이다.

2001~2003년 북한의 핵동결 지연과 함께 남북한 긴장완화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절대 우세할 때 북한은 대중동적성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을 재개할 것이고 미·북관계는 경색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전망 3: 2004년 이후 북한이 핵동결을 완료하고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 및 중장거리 미사일 생산 중단 그리고 생물·화학무기 생산중단에 나선다면 미국은 대규모 식량지원, 달러제공, 전면적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응한다면 미국은 미·북수교를 받아 들일 것이고, 주한미군의 1, 2단계 철수를 감행할 것이다.

4자회담이 2001년부터는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긴장완화를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의 4자회담 전략에서 나타난다. 미국내에서는 4자회담 추진론자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미국측과 협의를 통해 제안한다면 4자회담의 기능 축소에 합의할 것이다.⁸⁶⁾ 미국이 한반도 전쟁예방과

86) 「朝日新聞」, 1998.2.25.

미·북관계 개선에 있어 4자회담을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VI. 결론: 한국의 대응책

북한은 4자회담을 통한 남북한과 미·중이 만나는 형식적인 접근, 4자회담내 남북한 간접대화를 통한 남북한 직접대화의 회피 등 두 가지 운영방안으로 4자회담에 대응해 왔다. 이러한 운영방안과 함께 북한은 4자회담 예비과정 및 본회담에서 ① 미국과 접촉하고 한국을 배제하려 하였고, 어쩔 수 없는 경우 한국과 형식적으로 접근했으며, ② 4자회담을 빌미로 미국으로부터 추가 경제제재완화 및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을 얻으려 했으며, ③ 주 안건을 수용하려 하기 보다는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역제의를 함으로써 4자회담을 무용지물화하려는 전술을 보였다. 또한 ④ 북·미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중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한·미관계의 이간을 노렸다. 북한은 앞으로 전개될 4자회담에서도 기존의 전술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4자회담과 관련 미국의 전략은 결여되어 있는 듯 하다. 미국은 4자회담 의제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때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어느 수준까지 진척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동결 일정과는 달리 4자회담의 종착을 일컫는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더구나 4자회담이 중단되어도 이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한·미·중이 4자회담에 의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란 목표를 달성하려 해도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열쇠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전쟁종결조치의 장을 열도록 하기 위해 설득, 협상, 위협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왔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 왔다. 이러한 형태는 미국의 주도적, 한국의 보조적 역할과 함께 미·북간 대화·협상의 폭만 넓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미·북간은 의제와 관련 '제의-반응'하는 형태로 4자회담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4자회담에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4자회담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4자회담이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해 위기에 처하더라도 한국은 대북지원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등 비정치적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햇볕정책을 지속시키고, 한국기업의 대북 투자진출,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등을 장려해야 한다. 4자회담이 결렬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4자회담의 재개와 남북한 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

둘째, 정부적 차원의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에 따라 결정하고, 인도주의적 비정부적 차원의 지원은 4자회담과 연계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미정부는 4자회담과 대북 식량지원은 별도의 안건이라는 공식적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나 실제로 이를 연계해 왔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한국이 따라가서는 안된다. 대북 지원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축으로 해야 한다. 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합의서에 서명한다 하더라도 합의가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한 일개 협정 또는 합의가 자동적으로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하고 있는 상호체제인정,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을 실현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4자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상호불가침과 관련 국제적 보장장치
기구로서 '교차불가침협정'⁸⁷⁾을 맺어야 한다. 이는 분쟁당사자국이
상대지원국과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원국의 지원을 실
질적으로 감소시켜 가능한 도발행위를 사전에 막아 보려는 제도적
장치로, 한국이 중국과 북한이 미국과 불가침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가능한 억지할 수 있다.

남북한 신뢰구축과 관련 미·북간 협상은 미국의 대북 식량·의약품
지원, 경제제재완화조치, 달러제공 등의 수단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
도 제시하고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한 긴장완화의 구성요인과 북한의 핵동결 이행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4자회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
는 것이다. 4자간 평화협정과 북·미간 평화협정은 양립하는 것으로
미국이 후자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는 가능하다. 두 전례로부터 그 실
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첫째, 3차 4자회담에서 한·미는 북한군·한
국군·주한미군 등 한반도의 모든 군사력의 동시감축을 병행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 미국의 1990년 「동아시아 전략구상」
에서 주한미군 3단계 감축 계획안이 구상되었다. 첫째는 한·미 양측
의 공동 견해인 반면 둘째는 부시 정부의 독자안이었다. 부시 정부는
탈냉전기에 접어 들어 주한미군의 점진적·단계적 철수가 북한의 군사
력 확장을 저지시키고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판

87) 서독의 동방정책의 결과로 이루어진 '독·소조약'(1970.8), '독·폴란드조약'
(1970.12)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었다. 앞으로 북한의 침략위협 및 도발행위가 감소될 경우 미정부는 1995년 「동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을 변경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남북한 신뢰구축에 노력하면서 교차불가침협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첨단무기체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⁸⁸⁾

4자회담과 함께 한국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6자회담」(러시아와 일본이 추가 참여)⁸⁹⁾보다 「4자회담」이, 「4자회담」보다 「3자회담」(남북한과 미국이 참여)이, 그리고 「3자회담」보다 「2자회담」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한반도문제에 관련국들이 많이 개입하면 할수록 그만큼 한반도 당사자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적으로 「2자회담」(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한반도문제 당사자가 직접 모여 갈등·분쟁 해소방안을 논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88) 남한의 군사력이 자체적 방어능력과 억지능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이 있을때 까지 미군사력 전면철수는 보류되어야 한다.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동맹만 유지한 채 전면 철군을 감행한 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신속한 대응은 사실상 어렵다. 미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지지를 얻어야 되고, 원거리에서의 지원은 시간적·규모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미국이 '승리-승리'(Win-Win)전략을 가지고 있으나 중동과 한반도에서 동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 모든 전쟁을 승리를 이끈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89) 최근 거론되고 있는 6개국 선언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중국·러시아와 안보협력을 통해 풀어 나갈 수 있고 한-중, 한-러, 미-북, 일-북간 다자주의적 접촉·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중국적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한반도 전쟁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선언이 4자회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다. 워싱턴 당국(*The Journal of Commerce*, October 16, 1998)과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朝日新聞」, 1997.12.10)은 6자회담에 대해 소극적 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남한이 주도적으로 6개국 선언을 주도할 경우, 그 부대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남북이 그들 관계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여 4자회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러한 제안에 개방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⁹⁰⁾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남북한 정상회담을 제의, 북한으로부터 합의를 얻어 낼 경우 4자회담의 구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⁹¹⁾이란 미국무부 한 고위관리의 발언은 4자회담과는 별도로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지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한 직접대화가 가능하다면 4자회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거나 회담의 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자회담」의 성사 노력과 함께 한국정부는 「동북아 다자 협의기구」 창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참여국가간 경제·환경·과학·기술 등 비정치군사적 사항을 협의·관리하는 기구다. 「동북아 다자 협의기구」는 포괄적 사항을 협의·관리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와 같은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⁹²⁾와는 다르다. 남북한은 이 기구의 틀내에

90) 「한겨레신문」, 1997.12.7.

91) 「문화일보」, 1997.12.6.

92) 냉전시대에는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에 대해서 일본·중국·북한이 반대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전통적 대소감정과 불신으로 인해 일본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미·일 군사동맹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무기증강과 판매, 인권문제, 국내의 정치상황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북한을 제외한 관련국들이 헬싱키협정에서 제시된 국가간 협력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전개 감소와 여타 지역에서 나타난 예전에 없던 재래식 무기경쟁이 그 지역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중국과 일본이 인식하였고, 둘째, 무기경쟁억제는 다자간협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의식이 증가했으며, 셋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마약거래, 해적행위, 테러리즘 및 환경문제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종류의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관심의 증대 때문이다. 내란이나 정치압력 등으로 인해 국경을 건너오는 많은 사람들을 막지 못하는 것도 또다른 이유로 대두된다. Dalchoong Kim, "Prospect of a Multilateral Security Arrangement in Northeast Asia," a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German-Korean conference on Intergration and Disintegration in Europe an Northeast Asia, co-organized by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Economy and

서 대화·접촉의 폭을 넓히고 두만강 개발사업 및 동북아지역의 개발 사업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출해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공동번영 및 긴장완화 그리고 냉전적 구조 청산을 지향해야 한다.

「동북아 다자 협의기구」 구상은 1998.10.21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지지된 바 있다. 그것은 “세계에서 동북아지역에만 역내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구가 없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며, 따라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합쳐 안정과 번영을 위한 체제를 갖추는”⁹³⁾ 형태의 기구를 동북아지역에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동북아 다자 협의기구」 구상에 지지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냉전의 유산 하에 처해있는 한반도분단 상황에서 다자간 대화체제를 마련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⁹⁴⁾

그러나 미국은 공동지도체제 및 제3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동북아 다자 협의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⁹⁵⁾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창설될 기구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경험에서와 같이 동북아 및 한

Society of East and Southeast Europe,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tics
University of Munich, The Institute for Peace Affairs, October 11~12,
1993, p. 15 참조.

93) 「세계일보」, 1998.10.23.

94) 미국은 마·일·중·러 및 남북한의 民官(two-track) 형태의 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를 적극 지지한 바 있고, 아·태지역에서 「아·태 경제협력체」(ARF)와 「아세안안보포럼」(ARF)를 종축과 횡축으로 하는 이중보장체제를 형성해 이를 동북아지역에 적용시키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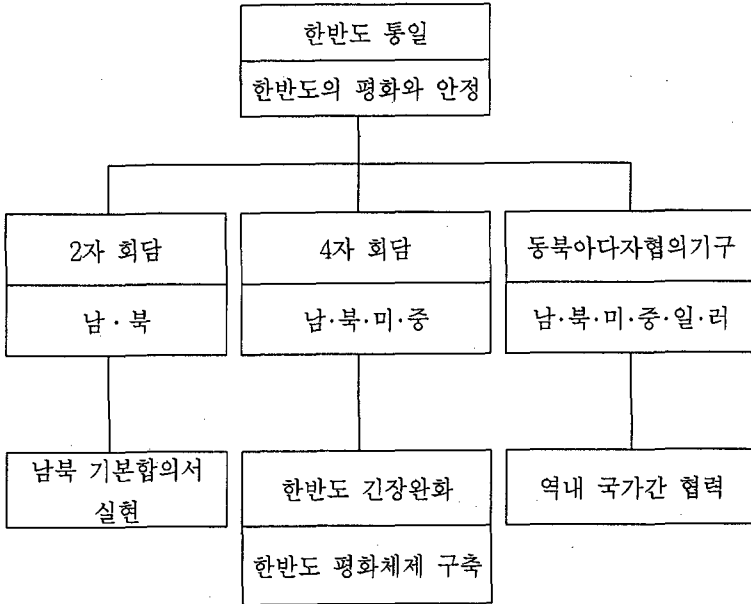
95) 미국은 1990년 CSCE와 같은 다양한 신뢰구축을 아·태지역에 적용하자는 호주와 캐나다의 외무장관 제안과 1991년 공동지도체제를 강조한 「북태평양 안보협력회의」(North Pacific Security Cooperation Conference) 창설 제안을 거부하였다. 1992년 아세안 주도의 「아세안 확대각료회의」(ASEAN-Post Ministerial Conference, ASEAN-PMC)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반도문제에 미국의 개입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아직도 냉전구조가 청산되지 않은 이 지역에서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이익의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미국과 함께 「동북아 다자 협의기구」를 창설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국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구의 틀내에서 일본·중국·러시아·북한 등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기는 역부족이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동북아 역내 국가간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는 4자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교차불가침협정 체결 등에 주력하고 햇볕정책의 지속과 '4자회담-대북 식량지원'의 연계성과 비연계성을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4자회담에서는 미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남북한 당사자들만이 만나는 2자회담을 성사시키고, 동북아 역내 국가간의 협의·협력체제를 이끄는 다자 협의기구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의 번영과 발전, 평화와 안정, 통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도표 6> 참조).

<도표 6> 한국의 다자회담 추진방향



참고문헌

1. 단행본

-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이현경.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통일원. 「4자회담 개최 관련자료」. 1997.12.
- Carter, Jimmy. *Keeping Faith, Memories of a President*. New York: Bantam Book, 1982.
- U.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Report*.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2.
- _____.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pril 1990.
- _____.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 November

1998.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2. 논문

김용호. “북한의 대미접근과 4자회담 전략.”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민족통일연구원 제7차 국제학술회의, 1997.4.15).

최영관.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방안.”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 제6회 국제학술세미나, 1996.11.29).

최춘흠. “한반도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한·중 학술서울회의, 1997.7).

한호석. “미국의 4자회담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논의」, 12호 (1996.5).

Baldwom, David A. “Newliberalism, Neorealism, and World Politics.” In David A.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Harrison, Selig S. “미국의 대북정책과 4자회담.”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제6회 국제학술세미나, 1996.11.29).

Helms, Jesse. “What Sanctions Epidemic?: U.S. Business’ Curious Crusade.” *Foreign Affairs*, vol. 78. no. 1.

- Kim, Dalchoong. "Prospect of a Multilateral Security Arrangement in Northeast Asia." A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German-Korean conference on Intergration and Disintegration in Europe an Northeast Asia, co-organized by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Economy and Society of East and Southeast Europe,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tics University of Munich, The Institute for Peace Affairs, October 11~12, 1993.
- Kim, Samuel S. "The Emerging Northeast Asian Order and the Chinese and Russian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11th U.S. Forum, Arlington, Virginia, August 1995.
- Rennack, Dianne E. and Robert D. Shuey. "Economic Sanctions to Achieve U.S. Foreign Policy Goals: Discussion and Guide to Current Law." *CRS Report for Congress*, January 22, 1998.
- Stephenson, Carolyn M. "Alternative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s." In *Alternative Methods for International Security*, Carolyn M. Stephenson. ed. Lanham, New York,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3. 기 타

의회증언, 의회보고서, 연설, 언론브리핑

김계관 4차 4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 기조연설, 1999.1.19.

박건우 4차 4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기조연설, 1999.1.19.

이시영 1차 4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기조연설, 1997.12.10.

제50주년 광복절 기념사, 1995.8.15.

Bosworth, Stephen W. Speech to The Society for Unification Studies on "The Security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a Post-Korean Unification East Asia," on December 30, 1998.

Cambell, Kurt. *Hearing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Pacific Affairs,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February 26, 1997.

Cliton, William J. *The 1997 State of the Union Address.* Speech delivered to the U.S. Congress. Washington, D.C., February 4, 1997.

_____. Mentioned at US-Japan Joint Press Conference on April 25, 1997.

Cohen, William S.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April 1997.

_____. Speech at the WAC on July 21, 1997.

Hearings on Review of the Policy Decision to Withdraw United States Ground Forces from Korea before the Investigations Subcommittee, House Committee on Armed

- Service*, 95th Cong., 1977~78, HASC No. 95~7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 Kartman, Charles.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Pacific Affairs, Senate*, July 8, 1997.
- Laney, James T. Speech to Asia Society Corporate Conference on "North and South Korea: Beyond Deterrence," on May 11, 1996.
- Lord, Winston.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Pacific Affairs,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March 19, 1996.
-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Briefing, April 8, 1996 & September 19, 1997.
-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May 20, 1997.

신문, 잡지

- 「경향신문」.
- 「남북대화」.
- 「내외통신」.
- 「동아일보」.
- 「로동신문」.
- 「문화일보」.
- 「북한뉴스레터」.
- 「북한동향」.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통신」.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讀賣新聞」.

「毎日新聞」.

「産經新聞」.

「時事解説」.

「朝日新聞」.

Asia Wall Street Journal.

Christian Science Monitor.

Defense New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es Defense Weekly.

The Journal of Commerce.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Washington Times.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공저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5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6,0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의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559, FAX:901-2547)

